

2007-12

책임연구보고서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 송 경 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체제 위기와 위기관리의 일반적 고찰	7
제1절 위기의 개념.....	7
제2절 위기 관리의 개념.....	11
제3절 기존연구의 경향.....	15
제4절 분석의 틀.....	19
제3장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	21
제1절 김정일 체제의 위기 현황.....	21
1. 대내적 위기	21
가. 정치적 요인	21
나. 경제적 요인	29
다. 사회적 요인	38

2. 대외적 위기	40
가. 사회주의권의 변혁.....	40
나. 미국의 대북봉쇄정책.....	43
다. 한국의 북방정책	49
제2절 김정일 체제의 위기관리 능력.....	52
1. 정치사상적 측면	53
2. 경제적 측면	61
3. 사회적 측면	72
4. 대외적 측면	75

제4장 김정일 체제의 변화전망과 대응책 81

제1절 김정일 체제의 변화전망.....	81
제2절 한국의 대응방안.....	99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11

표 목 차

<표 2-1> 위협대상의 종류에 따른 분류.....	10
<표 2-2> 위기의 전개과정.....	11
<표 2-3> 분석의 틀.....	20
<표 3-1> 김정일 체제의 위기 요인.....	22
<표 3-2>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의 식량 수급 실태.....	34
<표 3-3>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현황.....	45
<표 3-4>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현황.....	46
<표 4-1> 북한의 경제운영방식 개편 내용.....	88
<표 4-2> 주요 상품의 가격 변화와 인상률.....	90
<표 4-3>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내용.....	95
<표 4-4> 북한의 당면 위기와 대처방안.....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위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왔다. 김정일 체제가 과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관측 등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대내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대외경제협력 마비, 자연재해와 사회혼란(주민들의 사회일탈과 부정부패 등), 경제난(식량·에너지·자원·외화난)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의 세계 초일류 국가로의 등장, 미국의 대북봉쇄정책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한국의 경제성장 및 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등이 김정일 체제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정일 체제의 위기를 ‘체제붕괴론’과 ‘체제유지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론’, 막다른 선택인 ‘남침 붕괴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면서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으로 정치적 혼란과 식량난(1994년 냉해와 1995년 대홍수, 1996년 홍수, 1997년 가뭄)이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이완된 민심과 사회기강 확립, 경제난 회복,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그 첫 단계로 김정일은 3년간에 걸친 김일성 유훈통치(1994년 7월 8일부터 1997년 7월 8일까지)를 실시하였다.¹⁾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과도기적 문제들인 체제위기와 사회의 불안요인을 추스르고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완성함으로써 김정일 시대로 진입했다.”²⁾

이 시기 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³⁾라고 밝혔다.

1995년 6월 21일에는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를 통해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교훈 삼아 사회주의 사상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⁴⁾을 강조하는 한편 1996년 2월 7일 “고난의 행군정신의 빛나는 계승에 우리 혁명의 혈통이 곳곳이 이어져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체제 위기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슬로건을 제시 하였다.⁵⁾

두 번째 단계는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제창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및 경제난 해소, 국제관계 정상화에 주력하였다.

1)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하는 대리통치방법을 취하고, 직접적인 북한의 통치권자로 등장하지 않은 채, 김일성 사망에 따른 표류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내세워 지도자와 인민대중이 하나가되는 일심동체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강조하여 왔다.

2) 1997년 10월 8일 북한은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1998년 8월 22일 ‘강성대국론’을 제시하는 한편 1998년 9월에는 헌법을 개정하고,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시대를 출범시켰.

3) 「로동신문」, 1994. 11. 1.

4) 「로동신문」, 1995. 6. 19.

5) 「로동신문」, 1996. 2. 7.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이자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⁶⁾로 정의되고 있다.

1997년 10월 “선군후로”라는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선군혁명사상”, “선군혁명영도” 등의 용어가 북한의 공식적인 문헌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되었다.

2000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는 ‘1999년을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역사적 해’로 평가하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사전을 전개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고난의 행군’ 종결을 선언했다.

현재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군이 차지하였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수반하는 동시에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그로부터 파생한 주민들의 동요, 북한체제 수호, 경제정상화, 정치사상적 모범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 등”⁷⁾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정치방식으로 자리매김 되었다.⁸⁾

그러나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는 등 아직까지도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대적인 탈북 증가와 외부 사조 유입이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군 일군들의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으

6) 『로동신문』, 1998. 8. 22, 10, 19.

7) 고유한·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 평양학회, 『서울평양학회보 창간호』, 2002. 194면.

8) 김철우, 『김일성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2~25면.

며, 핵문제에 의한 북미관계의 갈등은 김정일 체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왔다.

김정일 정권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총력투쟁을 경주하면서 강력한 통제로 외부와 단절시키고 계급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도부의 응집력으로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보존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북중·북러 관계를 복원하고, 대서방외교관계를 확대시키는 한편 대남관계 및 북미·북일 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 안보불안 등 총체적 위기를 일거에 해결”⁹⁾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안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여 왔지만,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체제가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총체적 위기 해소에 고심하고 있으며, 체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견재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난 시기에 김정일 체제의 위기에 관해 인식과 정책적 측면에서 이중적 혼란을 겪어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과연 김정일 정권이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 당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수준에 봉착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대응방안 수립이

9) 최진욱, 『김정일 정권과 한반도 장래』(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2843~285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 요인들과 위기관리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일 체제의 견고함과 취약함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하에 향후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북한체제의 위기 요인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김정일 체제의 위기대응전략으로 등장한 ‘선군정치’가 북한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셋째, 북한이 ‘강성대국’의 국가목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넷째, ‘선군정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다섯째,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김정일 체제의 위기가 가속화되었던 1990년대를 전후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대외분야에 국한하여 진행했다.

이 시기를 연구의 범위로 택한 것은 김정일 체제의 위기요인이 ① 그 태생적 요인의 한계로부터 출발하고는 있으나, ②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권과의 경제협력이 마비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③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과 주민

일탈,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강행 등으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크게 작용하여 김정일 체제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왔다는 판단에서 기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북한연구 관련 문헌과 정부 간행물, 각종 논문, 북한 원전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문헌 분석적 기법을 통해 서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체제 위기와 위기관리의 일반적 고찰’에 대해 ‘체제 위기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기존 연구경향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기본 틀을 정립하였다.

제3장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에 대해 ‘김정일 체제의 위기 현황’과 ‘김정일 체제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대내적 위기’를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대외적 위기’를 사회주의권의 변혁,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 한국의 북방정책으로 나누어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였으며, 후자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위기관리 능력’을 ‘정치사상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변화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김정일 체제의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요약하였다.

제2장 체제 위기와 위기관리의 일반적 고찰

제1절 위기의 개념

오늘날 ‘위기’라는 말은 위협이나 위험의식을 염두에 두고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위기(Crisis)’란 심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즉각적인 대처행동이 요구되는 상황, 다시 말하여 시간적 급박함과 상황적 위태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기적 상황을 의미하며, 학자들에 따라 그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미국의 헤리티지 영어사전(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에 “위기는 ① 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 또는 상황, ② 어떤 전환점, ③ 어떤 불안정한 조건, ④ 돌발적인 변화, ⑤ 대립의 긴장상태”¹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위기’를 ‘위험과 기회의 결합’으로 이해하여 왔다.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위기’는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으로 나누어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① ‘거시적 분석’(macro-analysis)은 국제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위기’를 체제의 극단적 불안정의 상황¹¹⁾ 즉, 위협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Oran R. Young)과 리차드슨(James L. Richardson)으로 대표된다.

10) 이용필 외 3인, 『위기관리론』(서울 : 인간사랑, 1992), 13~14면.

11) Richard G. Herd, Crisis Resolution :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 Confrontations(Boulder : Westview Press, Inc., 1978), pp. 3~5.

영(Oran R. Young)은 ‘위기’를 체제 일부분에서 불안정한 세력들의 체제 혹은 체제 일부분에서 혼란시키는 상황¹²⁾으로 정의하였고, 리차드슨(James L. Richardson)은 체제차원의 위기, 정책결정 상황에서의 위기, 국제정치 상에서의 전쟁위기¹³⁾로 각각 나누어 정의하였다.

② ‘미시적 분석’은 개별적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회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빈슨(J. A. Robinson)으로 대표되며, 그는 ‘위기’의 근원이 의사결정자의 입장(내부 또는 외부에서 온 것이냐), 의사결정의 가용시간(대책을 위한 의사결정 가용시간이 짧은가 혹은 충분한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대적 가치의 중요성(낮은가 혹은 높은가)에 중점을 두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훈령에는 “위기를 정치·군사·경제·외교의 복합적인 상황 조치가 요구되는 중대사태 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군사적 조치가 예견되거나 요구되는 전쟁 이전의 상황”¹⁴⁾으로 정의하였다.

국가비상계획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가치나 핵심적인 목표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긴박한 상황, 평화와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다른 국가와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표출되어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준전시 상황, 국내외의 제반 위협으로 인해 심대한 위협상황에 직면한 것을 정책 담당자가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긴급 상황”¹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Oran R. Young, *The Intermediaries: Third Parties in Institutional Cri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10.

13) James L. Richardson, *Crisis Diplomac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10~11.

14) 「국방부」, 『위기관리실무지침』(서울: 국방부, 1998), 6면.

15) 「비상기획위원회」,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서울: 비상기획위원회, 1996-9), 1면.

국가 수준의 위기는 대개 안보 차원의 관심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체제적 접근, 정책 결정적 접근, 연합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체제적 접근은 “위기는 기존 국제체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붕괴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적대적이고 불안정한 상호 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¹⁶⁾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맥클랜드(Charles A. Mc-Clelland)이다.

② 정책 결정적 접근은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는 최우선 목표가 위협 받고, 반응을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정의”¹⁷⁾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허먼(Charles F. Hermann)이다.

③ 연합적 접근은 “국제 위기란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심각한 위협, 기습, 짧은 결정 시간을 인식하는 상황이며, 아울러 그들 국가 간의 상호 작용에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¹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맥코믹(James M. McCormick)으로 대표된다.

이와 같이 위기는 대체로 국가의 존립이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협의 대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여 도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6) Charles A. McClelland, "Access to Berlin : The Quantity and Variety of Events, 1948-1963," in J. David Singer(ed), Quantitative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 Free Press, 1968), pp. 160~161.

17) Charles F. Hermann, Crises in Foreign Policy : A Simulation Analysis(Indianapolis : The Bobbs -Merrill Company, Inc., 1969), p.29.

18) James M. McCormick, "International Crises : A Note on Definition,"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 Vo1. XXXI, No. 3(1978), p.356.

<표 2-1> 위협대상의 종류에 따른 분류

위협 대상	위협 내용	위기 형태
국가존립	정치적 주권상실, 국가안보, 국토침략 또는 유린, 국민생명 및 재산침해	전쟁, 점령, 약탈, 테러, 요인암살
체제존속	통치 이념과 정치체제 부정, 제도 및 기구 전복 시도	내란, 혁명, 폭동
정권유지	정권의 정통성 시비, 공공정책의 집행 방해	반란, 소요, 과격시위
국가사회 안정발전	식량 및 전략자원 수급실패, 경제성장 둔화, 사회갈등 심화, 인명손실 및 생계유지 곤란	각종제재, 외교고립, 실업, 인플레, 노사분류, 자연재해, 사고
자연환경 보호	생태계의 질서 파괴, 생활공간의 침해	자원 고갈, 환경오염
개인안전 삶의 질	각종 범죄, 마약·약물해악, 노인·정신질환문제, 사회복지	비행, 자해(살), 정신병, 마약중독 등

※출처 :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 집문당, 1999), 43~4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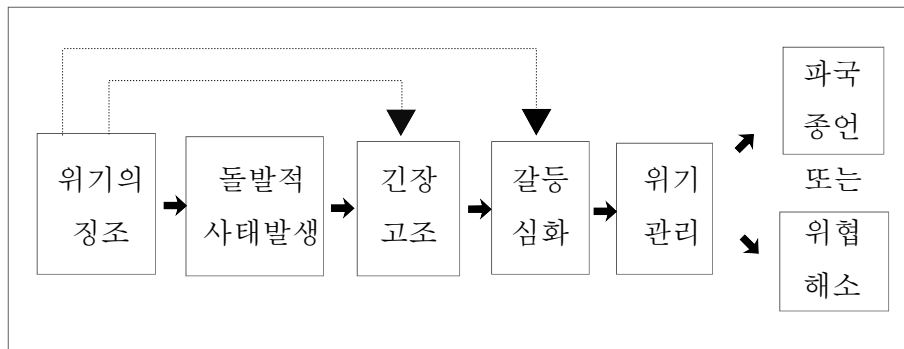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위기’에 대한 개념은 ‘국제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¹⁹⁾, ‘행위자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하여 정의되어 왔

19) 국가적 수준의 위기는 체제 내외적 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별개의 영역에서 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체제 내적 위기 요인으로는 통치의 정당성 상실, 정책 집행능력 마비, 국민에 대한 보상적 능력 결여로 발생하며, 체제 외적 위기 요인은 체제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하는 것이 선차적인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위기의 전개과정



※출처 :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 집문당, 1999), 45면.

제2절 위기 관리의 개념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기존의 위기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취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전쟁, 체제붕괴 등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여 체제유지의 위협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위기관리²⁰⁾에 대해서는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소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발전되어 왔다. 현재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

외부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의해 체제의 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20) 타국의 이익과 경쟁하고 절충하는 외교 형태의 극단적인 형태를 지칭한다.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대두하여 왔다. 하나는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능력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는 전쟁발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의 입장으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며 전쟁은 단지 국가들에게 열려진 많은 전략들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위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²¹⁾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기관리’의 개념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위협과 기회’, ‘상호경쟁’과 ‘위협공유’라는 국제위기의 속성을 반영²²⁾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러스텐(Lynn Rusten)과 스텐(Paul C. Stern)은 “위기관리란 침해된 국가이익의 보호와 군사 분쟁 또는 원치 않는 위기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간의 근본적 상충에 대한 조화를 위해 위기관리 전략을 개발·수행하는 것”²³⁾으로, 윌리엄스(Phil Williams)는 “위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인 동시에 위기가 당사자 국가에 유리하게 해결되어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으로, 리차드슨(James L. Richardson)은 “당면한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원상회복 또는 상황개선을 추구하는 행위”²⁴⁾로 각각 정의를 내렸다.

21) 이용필 외, 『위기관리론 : 이론과 사례』 (서울 : 인간사랑, 1992), 55~56면.

22) Richard Ned Lebow, *Between Peace and War : The Nature of International Crisis*(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p.292.

23) Lynn Rusten and Paul C. Stern, *Crisis Management in the Nuclear Age*(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ic Press, 1987), pp.1~2.

24) Gilbert R. Winham, *New Issues in International Crisis Management*(Boulder : Westview

위기관리의 유형은 교섭적 위기관리와 수습적 위기관리, 적응적 위기관리로 크게 나누어진다.²⁵⁾

첫째, ‘교섭적 위기관리’는 위협의 근원이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도발행위로부터 기인된 위기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익의 양보, 관철 또는 상호조정을 위한 흥정이나 협상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위기의 해결을 시도하려는 입장이다.

둘째, ‘수습적 위기관리’는 조속하고 효과적인 사태수습을 위해 원상회복 또는 원래보다 발전되거나 개선된 상태를 지향하고 있는 위기관리 유형으로,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이 타국의 실수나 오류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에서 위기가 연류된 경우와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 또는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한 긴급사태에서 위기가 야기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타국의 실수나 오류에 의한 우발적인 사태로 야기된 경우에는 ① 유관국가들과 상황통제와 대책논의를 위한 직접적인 대화채널의 설치, ② 동맹국이나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의 및 공조체제 확립, ③ 사태수습을 위한 관련정보의 교환과 공동 노력에 의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태의 해결방안 강구, ④ 사후 보상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된 위기관리 업무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연적·인위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의 경우 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일원화된 상황통제지휘소의 설치와 비상연락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하고, ②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사태진압 조치와 응급구호 및 재난조치를 위한 인원·장비 및 물자의 투입과 활동을 전개하면서, ③ 상황발생 지역의 주변정리 및 질서를 유지하고, ④ 사태수습 후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Press, Inc., 1988), p. 15.

25)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 집문당, 1999), 47~48면.

셋째, ‘적응적 위기관리’는 위협의 근원이 국제 및 지역주변 질서나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 즉, 상황적 변화에서 발달된 경우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무기체제의 개발이나 도입, 지역 또는 세계적 세력분포나 판도의 변화, 주요 동맹관계의 변화, 새로운 종류의 국제적 행위자의 등장, 국제적 행위를 규정하는 원칙이나 규범의 변화, 또는 인접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질서의 급작스런 변화 등이 포함된다.

적응적 위기관리의 핵심은 당면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파악과 의미 분석, 장·단기적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원만하게 적응시키는데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위기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더불어 ‘적절한 대응책’으로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정조직체계(전시와 평시를 포괄하는 위기관리체계 정립)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각종 위기 사태에 대한 ‘표준행동절차’를 준비하여 평소부터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위기의 대응 및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위기탐지→대응조치 결정→대응조치 실행의 3단계 과정을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① 평상시 우발적인 비상사태의 발생을 철저히 감시하고, 신속히 경보하는 정보통신망 구축하여, ②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결정된 정책을 착오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훈련된 인력과 충분한 장비 및 물자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기’는 철저한 관리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작은 불씨라도 방치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제3절 기존 연구의 경향

김정일 체제의 위기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김일성 사망 이후 이데올로기 및 리더십이 내재되어 있는 권위의 동시대적 붕괴에 그 시발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권력세습과정에서의 정치적 과열과 경제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사회불안, 국제적 고립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크게는 세 가지 방향에서 김정일 체제의 위기 및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김정일 체제의 위기원인과 위기수준을 분석하여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한 연구이다. 포스터 카터, 송영대, 김성철 등으로 대표된다.

포스터 카터(Aidan Foster-Carter, 영국의 리스대 사회학 교수)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 독일의 좌파 사회학자)의 『위기에 관한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위기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는 경제, 합리성, 정당성, 동기유발의 위기를 북한에 적용·분석한 결과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변하지 않으면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여 인민봉기를 유발할 것이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 경제는 희생될 수 있으나, 체제의 정당성이 소멸하게 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²⁶⁾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은 1997년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26) 임창수, “김일성 사후 북한의 위기원인·관리·해소에 관한 분석”(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7), 4~13면.

김정일의 지도력과 통제력, 이념, 엘리트, 경제력, 외부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북한의 내구력을 정밀분석 했다.

그 결과 북한은 경제 위기에 봉착하였고, 외부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통제력과 엘리트, 군부의 사기 및 충성심의 가변성은 있으나, 내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성철은 1996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에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직전의 체제 위기가 소련이 15, 체코슬로바키아 16, 루마니아 18 이었던 것에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의 체제 위기 지수는 17에 근접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체제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주의권 붕괴직전에 발간한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대실패(Grand Failure)에서 설정했던 10가지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북한의 이론·엘리트·경제·통제·대외관계분야에 15개 RINU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37개 측정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북한의 위기상황을 파악하였다.

둘째는 김정일 체제의 위기관리의 한 측면으로 북한의 대외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미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스타일, 협상전략 및 전술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김용호, 정옥임, 김의곤, 전인영, 고유환, 이부영을 들 수 있다.²⁷⁾

김용호는 “북한의 대미핵협상의 특성 및 교훈”(『통일경제』 1995년 3월호, 71~86면)에서 북한의 협상스타일을 중·소 및 동구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대미핵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의 협상능력 및 위기관리 능력을 검토하였다.

정옥임은 북한의 핵의혹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책결정 및 위기관리 형태와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결정요인

27) 정희태, “북한의 대미위기관리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1), 11~15면.

을 도출하여 미국의 위기관리 정책을 분석했다.

전인영은 “북한의 대미협상상태 특징”(『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995년 10월호, 301~309면)에서 북한의 대미 또는 대외 행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위기관리능력과 협상능력을 평가하였다.

김의곤은 “평양의 벼랑끝 외교 : 대한민국과 대미국 협상행태 비교연구”(『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998년 11월호, 381~395면)에서 남북한 기본합의문과 북핵문제를 통해 북한의 대남, 대미 협상 형태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고유환은 “북핵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이부영은 “북한 핵위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금석” 등 북핵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셋째는 북한의 경제위기와 향후전망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다. 오승렬 · 최수영 · 박순성(1995), 최수영 · 김영운 · 오승렬(1997), 전홍택 · 김상기 · 이근(1997)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을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으로 보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의한 외부적 충격과 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에서 찾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위기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김정일 체제가 조기붕괴 할 것이라는 붕괴론적 시각과 체제유지론적 시각에서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 왔다.

① 김정일 체제의 붕괴론적 시각에서는 북한 체제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위기 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북한 내부에서 위기관리 체제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의 위기로인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는 반면에 내적 위기 체제의 유용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김정일 체제의 유지론적 시각에서의 연구들은 북한이 정치 · 경제 ·

사회·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체제 붕괴로까지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이 처해있는 위기 요인의 심화와 관리 체제의 작동을 균형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낙관론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③ 김정일 체제의 위기요인 자체를 경시하려는 시각의 연구들은 북한 체제의 위기 자체를 고도의 외교적 전략 하에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세계의 인도주의적 온정에 호소하여 경제난 타개와 국제적 고립을 동시에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견해를 피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북한 체제와 북한의 생존 전략의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 요인의 심화 자체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생존위기를 김정일 체제의 붕괴와 기계적으로 연관시켜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생존위기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북한 체제의 존속여부를 전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론적 시각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에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북한 체제의 내구력, 위기진전, 전망 등에 관한 연구들로 그 폭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위기에 관한 연구를 지나치게 붕괴론적 시각에 편중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의 정치 구도 및 위기관리 능력,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다소나마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분석의 틀

김정일 체제가 직면한 위기는 국내외적 · 구조적 상황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적 상황변화는 동서냉전의 해체로 미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이 북한을 안보적 위협과 국제적 고립으로 몰아갔다.

특히 소련의 붕괴와 동구사회주의권의 변혁으로 북한은 국제경제협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대내적 상황변화는 김일성 사망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외화난을 증폭시켰으며, 북한 주민들의 사회일탈, 권력상층부의 부정부패가 김정일 체제의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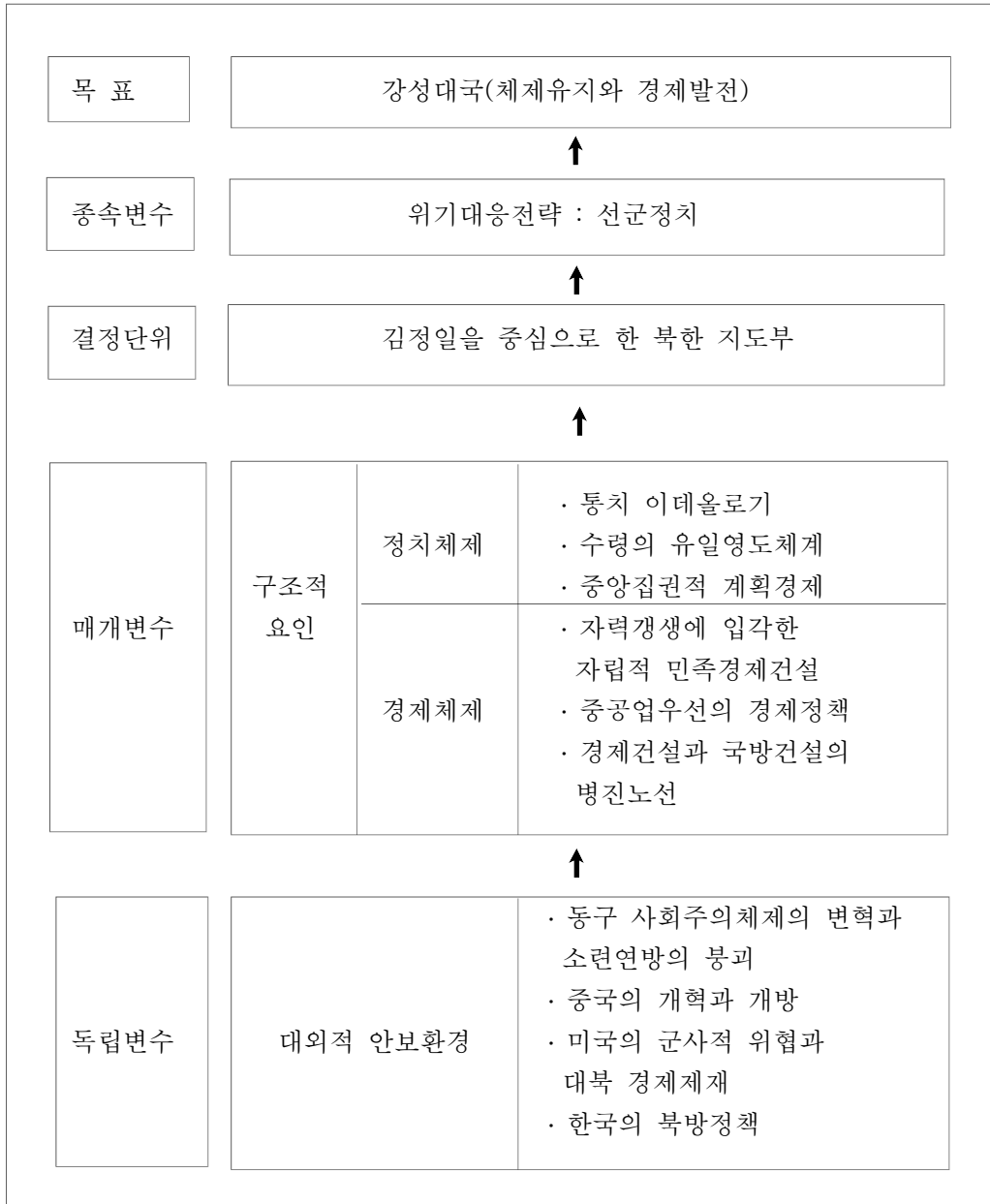
구조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독특한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제라는 권력구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수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황적 요인에 의한 위기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위기관리는 위기 상황 하에서 김정일 체제가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채택하였는가 하는 정책의 선택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 김정일 체제의 위기를 고찰하고 ‘북한식 위기관리’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 적용한 위기 및 위기관리 개념과 ‘선군정치’, ‘강성대국론’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논리와 전략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 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적립하면 다음과 같다.

<표2-3> 분석의 틀



제3장 김정일 체제의 위기실태

제1절 김정일 체제의 위기 현황

오늘날 김정일 체제는 국가·체제의 존망이 달린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것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심각한 경제난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사회운동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하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위기는 그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제난과 사회운동 시스템의 비효율성,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 대내적 위기

김정일 체제가 직면한 대내적 위기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치적 요인

정치적 위기 요인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위기와 김정일 체제의 리더쉽 위기를 들 수 있다.

김정일 체제의 위기를 대내·외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3-1> 김정일 체제의 위기 요인

구분		위기 요인
대내적 요인	정치	◎ 이데올로기적 위기 • 마르크스-레닌주의 현실성 상실 • 주체사상 및 정통성 위기 • 김일성 사망과 유훈통치 ◎ 김정일 체제의 리더쉽 • 권력승계, 군부의 정치개입 • 세대교체, 파벌투쟁, 엘리트 동요
	경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경제정책 실정 • 중공업 우선정책, 경공업과 농업 경시 ◎ 경제난 •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 자연재해 ◎ 국제경쟁력 저하 • 자력갱생에 입각한 폐쇄경제 체제 • 폐쇄경제 체제, 자본과 기술의 한계 • 기계설비의 노후화, 노동력 저하
	사회	◎ 사회운용 시스템의 비효율성 • 부처 간 횡적 조정 심화, 공급체계 마비 • 주민신뢰도 약화, 생활안정 열악 • 개인의 창의성 말살 ◎ 사회기강 문란 • 탈북자 및 사회 이완현상 증가 • 불평등 심화, 사회단체 활동 약화 • 부정부패 만연, 범죄 증가 ◎ 자본주의 사상 유입
대외적 요인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변화	◎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 기존 대외경제 마비
	외교적 고립	◎ 미국의 대북봉쇄정책 ◎ 중국의 개혁·개방(사회주의 시장경제)
	한국의 북방정책	◎ 한국의 경제성장 및 외교역량 강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유일체제란 절대 권력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북한사회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북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당 규약 전문에는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유일사상체제가 수령 중심의 북한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수령 지도의 위대성과 무오류성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에 경제의 합리성을 종속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력 저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²⁹⁾

북한의 유일체제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창의력을 고갈시키면서 체제 비판을 억제하는 등 북한경제의 질적 상승을 의미하는 내부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김정일이 권력전면에 등장 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10대원칙이 제시되었고, 이는 곧 북한 주민들의 행동강령으로 되었다.

10대원칙은 “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해야 한다. ②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 하여야 한다. ④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⑧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

28)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 · 체제 · 지도자』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52면.

29) 이종석, 위의 책, 340~343면.

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민,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⑩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³⁰⁾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어려움은 김일성 사망 이후 1997년까지 당 총서기와 1998년 헌법 개정까지는 국가 원수를 공식으로 남겨 둔 비정상적인 국가제도를 영위해 왔다는 점에서 입증되었다.

더구나 1995년부터 1998년 가을까지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았고 국가예산조차도 공포되지 않았다. 또한 당 중앙위 정치국도 거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장엽 국제담당 비서나 서관희 농업담당 비서의 후임자도 알려진 바 없다.³¹⁾

김정일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위기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구하고 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설명이 상실되었고 결국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부터 가속화 되었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는 예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폐쇄주의와 세습왕조체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독자적 논리체계를 갖추고 초강대국과의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획득해내는 벼랑 끝 외교술 등 다른 공산사회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나 방법론조차 북한에 대해서는 쉽게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은 실로 예외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³²⁾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30) 이만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 도서출판 황금알, 2004), 199~200면.

31)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경남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28면.

32) 김학준, 『김정일과 코카콜라』 (서울 : 동아출판사, 1995), 69면.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³³⁾ 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영역에서 다 작용하는 일반적 합법칙성을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보편적 사상으로,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지도사상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① 김일성의 신격화와 권력의 세습화를 변호하여 왔고, ② 경제건설과 군비건설의 병진정책의 달성을 위한 동원체제의 확립을 합리화하는 한편 ③ 중·소 분쟁에서의 중립노선과 실리추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대남혁명을 위한 수출용이며, ④ 제3세계에 대한 북한의 이미지 쇄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간판일 뿐 심오한 철학적 근거나 있는 이론이나 사상은 아니라는 데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³⁴⁾

북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기치가 개인의 권력독점 및 이상화를 위한 사실상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이상화라는 왜곡된 용도로 차용되면서 주체사상은 진실성과 일관성이 상실하고 있다. ‘수령론’의 근거에서 인민대중은 주체가 상징하는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자세습화를 추구하면서 주체사상은 주인 잃은 의식과 행동의 강령으로 표류하고 있다.³⁵⁾

33) 사회과학원출판사,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원출판사, 1973), 1055면.

34) 이용필, 『북한정치체제』(서울 : 교육과학사, 1985), 446면.

북한은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³⁶⁾의 구호를 채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한편 1995년 8월 28일에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김정일의 논문을 통해 붉은기 사상을 공식화하였다.

19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살아도 우리식 사회주의와 운명을 같이 하고 죽어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어 나가는 길에서 영예롭게 한 몸 바칠 것”을 강조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적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것”³⁷⁾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이 붉은기에 새겨진 천리”라고 밝히면서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³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체제 유지 및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 사상의 이론적 기틀 위에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론으로 전군, 전인민이 총폭탄정신으로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체제결속을 위한 사상 사업을 강화시켜 왔다.

김정일 체제의 리더쉽 위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파벌투쟁, 군부의 정치개입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리더쉽 위기는 권력승계와 관련된 엘리트 블록의 내부의 문제와 권력승계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 리더쉽 형태의 변화 문제로 나타났다.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치적 엘리트 블록을 효과적으로 장악하였는가, 아니면 새로운 리더쉽 형태를 창출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3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35면.

36) 「로동신문」, 1990. 1. 1.

37)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91년 제5호, 25면.

38) 고유환, “김일성 사후 3년 북한 무엇을 남겼나”,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1997년 7월호, 37면.

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의 권력투쟁³⁹⁾은 지금까지 외부에서 포착될 정도로 표면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의 1인 독재체제와 통치형태, 김정일 시대의 통치 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형식적이거나 국가 권력을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당 및 군사 분야에 분권화시키고 있는 것은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군부 장악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에는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제창하면서 군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시켜 왔다.

김정일의 이러한 노력은 ① 대대적인 군 장성 진급 및 군의 위상 강화, ② 군부대 현장 지도 방문을 통한 군의 충성심 유도, ③ 군부 인물들을 권력 상층부에 대거 기용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북한지도부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혁명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남한이 거꾸로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다”⁴⁰⁾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드러내었다. 더구나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대외무역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을 상대로 한 무역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⁴¹⁾

또한 “선군정치가 창조된 시기를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제국주의자들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사회주의 보루인 북한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총공세를 취하였던 어려운 시기”였음을 강조하여 왔다.

39) 1994년 함경북도 지역 주둔 제6군단에서 군관 100여명이 체포되고, 호위총국에서도 발란기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음(중앙일보, 1996년 2월 12일자).

40) 『로동신문』, 1991. 6. 25.

4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6면.

노동신문은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세계 정치구도와 역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회주의 붕괴를 기화로 반제자주역량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었고,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화살이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 압살책동에 대항하여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⁴²⁾고 밝혔다.

특히 혁명의 길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열한 계급투쟁과 사상적대결속에서 강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필승의 신념과 락관으로 충만 된 혁명위업을 계승해⁴³⁾ 나갈 것과 미국이 심리전과 끈질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을 강화하고⁴⁴⁾, 우리나라에 대한 무장해제와 군사적공격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사연습과 정탐행위 등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는⁴⁵⁾ 상황에서 김정일 이 제시한 사상결단으로 일관된 ‘선군정치’가 자주성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당과 군대, 정권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선군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⁴⁶⁾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정치적 위기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동요, 통치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김정일은 20여 년간에 걸친 후계자 수업을 마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권력을 승계하였으나,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는 내놓을 만한 혁명투쟁이나 업적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이 내세운 명분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함으로 군을 중심으로 한 지지확보와 정통성 확립에 주력하여 왔던 것이다.

42) 「로동신문」, 2003. 9. 3.

43) 「로동신문」, 2003. 8. 1.

44) 「로동신문」, 2004. 9. 14.

45) 「로동신문」, 2003. 6. 5.

46) 「로동신문」, 2004. 4. 9.

더구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여 왔지만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가 서서히 번져나갔다. 또한 식량배급이 정상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권력은 사회의 저변 층까지 미치지 못해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특히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탈북이 속출하는 등 주민들의 사기저하는 결국 통치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 경제적 요인

경제적 위기 요인은 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② 국제 분업체계를 무시한 자립적경제노선, ③ 중공업우선 정책으로 경공업과 농업이 경시되면서 산업간 불균형 초래, ④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단절, ⑤ 미국의 대북봉쇄정책, ⑥ 자연재해 및 자본과 기술의 한계, 노동력 저하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중앙집권화 된 계획경제이며 유일한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은 “착취와 압박의 사회경제적 근원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라며 소상품 생산자들의 사적소유는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과 가치법칙의 작용에 기초하여 빈부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계급분화를 가져오게 한다”⁴⁷⁾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발전의 합법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소유 제도를 받아들여 사회주의제도를 기초로부터 파괴하고 자본주의로

47) 권오현, “생산수단에 의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 (평양 : 평양출판사, 1993), 60면.

복귀하는 반동적 행위”⁴⁸⁾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키며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 밑에 경제를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초”⁴⁹⁾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외연적 발전단계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기술혁신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단계에서는 조정능력의 한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정책과 경제관리 방식도 북한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으로, 1966년부터는 국방산업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1961년 12월부터는 대안의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에 입각하여 당권 우위의 고도의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을 제시하였다. 통상적으로 경제계획의 작성과정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⁵⁰⁾

48)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제1호(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45면.

49) 김기호, “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을 거세하려는 현대 수정주의론의 부당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4년 제2호(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53면.

50) 제1단계는 예비단계로써 생산단위에서 작성된 경제계획을 지구계획위원회 및 정무원(현 내각)의 각위원회와 전문부서에서 종합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최초 작성된 계획서와 당 중앙위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기초로 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계획으로 당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있다.
제3단계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다시 하부 단위기관으로 시달하여 이를 근거로 한 해당 계획부서에서 계획초안을 만들게 된다. 이 계획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국가경제계획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제4단계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한 국가경제계획초안을 정무원(현 내각)전원회의나 당 중앙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경제계획은 법적 의무로 이행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은 지나치게 주체를 강조하고 산업에서의 자기완결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등 부문적인 불균형 정책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에 비해서 경공업과 농업이 낙후되는 한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비재 산업부문의 저 생산, 사회간접자본의 빈약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내수중심의 경제정책 지향은 대외경제의 상당부문을 봉쇄시키는 반면에 주민생활 향상을 외면하고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결국은 경제 각 부문 간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경제 침체를 가져왔던 것이다.

경제관리 방식에서는 당이 생산단위를 장악하여 왔기 때문에 경제적 계산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우선하는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 지배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경직성,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불합리한 생산비용의 반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대부분 단절되고 대폭 축소되었다.

더구나 소련으로부터 공급되어 온 원유와 식량이 단절되고 중국의 구상무역 대신 경화 결제의 요구로 북한의 경제관계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제시장을 거의 독점해온 마그네사이트의 수출판로가 막히고, 외화고갈로 원유·코크스탄 등 수입이 중단되면서 승리화학연합기업소의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예를 들면 1990년 북한의 대 소련 교역 규모는 25.7억 달러로 북한의 총 교역 규모 47.7억 달러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1991년에 들어와서는 4.7억 달러로 감소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점하는 비중도 17.3%로 급락하였다.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계속 축소돼 1995년 교역 규모는 8천 3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도 자국의 경제개혁 진전에 따라 그 동안 북한에게 우호가격으로 제공했던 원유 등 기본 원료를 국제가격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원유가격 도입을 1990년에는 톤당 58달러였으나 1991년에는 126달러로 급증함으로써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다.⁵¹⁾

현재 북한의 경제 위기는 흔히 3난, 3저, 3악으로 특징지어 진다. 즉 북한 경제는 현재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과 국제경쟁력 및 노동력, 기술수준 저하, 생활안정 열악, 제품조악, 기계설비노후의 3악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공장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 비료, 비닐론, 시멘트, 금속공장들의 정상가동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최근의 극심한 식량난 및 기아사태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개념으로 볼 때 1990년대에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었다. 민수경제 부문인 제1경제 분야에는 에너지 부족과 원자재 부족이 심화되어 순환구조가 거의 마비된 상태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주민생활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국영상점의 상품이 고갈되고 상품공급체계가 무용화되어 있는 반면, 암시장 등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화폐의 역할도 유명무실해져 경제운용을 악화시키는 등 월급의 의미도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과중한 군비분담 등 경제난에 대해 ‘외인론’을 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재해라는 ‘환경론’을 강조하여 왔다. 1993년에는 냉해, 1994년 우박피해, 1995년 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재

51) 장달중 외, 『김정일 체제의 북한』 (서울 : 아연출판부, 2004), 206면.

해, 1996년 수해, 1997년에도 한발 및 해일로 인해 농업분야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 8월의 대홍수는 100년에 한번 있을 정도로 컸으며 전국에서 200만 톤의 벼와 옥수수 생산이 감소되고 100만 톤 정도의 곡물재고가 유실되어 손해는 150억불에 달하였다고 한다.⁵²⁾

UN산하 WHO 등 국제기구는 북한의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5년 7~8월 집중호우로 북한은 전국토의 약 75%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5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와 WFP 특별보고서(FAO/WFP1996)에 따르면 1996년 북한의 실제 식량 소비량은 344만 톤으로 이는 1인당 평균 427g(1,537 Kcal) 에 해당되며 FAO/WFP가 최소 필요량으로 보는 1인당 1일 평균 458g(1,637Kcal)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90년대 북한 경제는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⁵³⁾되었고 “식량난으로 인해 최소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⁵⁴⁾하였다.

1999년부터는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2% 이상의 플러스 성장으로 소폭이나마 경제회복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자력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제의 최대 문제인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다.

식량의 어려움은 1980년대 5~600만 톤을 생산하던 것이 1990년대

52) 하이와라 료(역자: 양창식),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 (서울 : 도서출판 알파, 2005), 138면.

53) 「한국은행」, 『1999년 북한 GDP 추정 결과』 (2000. 6. 20)

5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 한울, 1999), 305면.

에는 4~50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6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300만 톤 수준으로 격감하여 식량난은 절정에 달하였다.⁵⁵⁾

<표3-2>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의 식량 수급 실태

(단위 : 만 톤)

년도	총수요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1991	647	481.2	165.8
1992	650	442.7	207.3
1993	658	426.8	231.2
1994	667	388.4	278.6
1995	672	412.5	259.5
1996	673	345	328

※출처 : 남궁역, “북한의 쌀 지원요청 배경과 지원 방안”, 『구조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32면.

2000년도 이후부터는 연간 400만 톤 이상의 곡물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정상적인 식량 공급에 필요한 630만 톤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⁵⁶⁾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1970년대 또는 중진국 기준의 1인 1일 식량 소요량을 적용할 경우 120만 톤, 국제식량기구(WFP)의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⁵⁷⁾

식량난의 궁극적 원인은 식량생산 및 식량 수입 능력의 부족 때문이

55)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 민족 중심적 이해를 위하여』 (서울 : 당대, 1996), 115~153면.

56) 「한국은행」, 『200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3. 6)

57) 김성훈·심의섭 편저, 『사회주의와 북한의 농업』 (서울 : 비봉출판사, 2002), 285~286면.

며, 이는 사회주의 집단적 영농방식과 주체농법의 태생적 한계와 1994~1997년의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지와 농산물의 유실, 사회주의권 분괴로 인한 농업 원자재의 중단, 대외 신용도 저하, 외화 획득 원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에너지난 및 외화난⁵⁸⁾에 따른 수입의 감소는 공업생산의 경감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공산품수출의 급속한 감소로 말미암아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외화난·에너지난·식량난의 악성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다.

문제는 농업을 뒷받침해줄 북한의 광공업과 건설 부문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군수공업 위주의 '제2경제위원회'를 제외한 공업생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상태이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는 공업생산의 감소를 넘어서 '비공업화' 현상마저 보이고 있으며,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더구나 에너지와 원료 부족으로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었는데 1990년도에 들어와 석탄 생산량과 원료 도입량, 발전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통계청이 발행한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에는 2004년 석탄 생산량이 2280만 톤으로 1989년의 3508만 톤에 비해 35%, 원료도입량은 1990년(252만 톤)에 비해 2004년(52.7만 톤)에는 무려 79%, 발전량은 1989(294Kwh)년에 비해 2004년(206Kwh)에는 29.9%나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전량의 감소 원인은 전력생산이 6:4의 비율로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970년대 이후 산림의 황폐화, 수자원 부족,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1990년부터는 우호적 교역을 통해 원료를 공급

58) 북한의 외채는 1990년 78.6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24.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석유량은 1/3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이는 수송부문과 농업부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고, 석탄의 채탄량도 신규 탄광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등 지속적인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해 김일성 자신도 “우리가 지난 시기에 사회주의 시장을 기본으로 하여 무역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우리는 사회주의 시장을 기본대상으로 하던 무역정책을 자본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⁵⁹⁾고 언급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도 “어디가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제일 긴급하게 풀어야 할 것은 식량문제”⁶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북한의 권력 상층부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허물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⁶¹⁾고 강조하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류레없는 시련과 난관은 밥 가마에 안칠 때 식감이 없어서 미역을 건지려고 바다가에 나가는 녀인들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까맣게 찍혔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으며, 미제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으로 조성된 난관과 애로를 뚫고 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면 강철생산을 결정적으로 추겨 세워야 하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식량난이었다”⁶²⁾고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2003년 10월 3일 「로동신문」은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는 논제의 정론에서 1995년부터 1998년 고난의 행군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직장이나 공장 각 가정마다 가슴을 도려내는

5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6면.

60)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1997년 4월호(서울 : 조선일보사, 1997), 57면.

61) 「로동신문」, 2004. 12. 27.

62) 「로동신문」, 2004. 3. 23.

통곡이 쉴 새 없이 들려오고 그 길고 긴 낮과 밤, 검은 상복에 하얀 리본을 머리에 달고서 침통한 장례행렬이 묵묵히 흘러간 비애의 거리...전쟁도 아닌 평화의 시기에 왜 공장은 숨을 죽이고 조국의 옥토는 말라 버렸으며 나라의 동력인 전력마저 부족하고 때로는 달리던 열차는 멈춰서고 평양 시내 가로등마저 왜 꺼야만 하였는가? 저토록 부러워할 것 없이 유족하고 행복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배를 굶고 추위에 떨어야만 했던 말인가? 어떤 동란 때에도 잇을 수 없었던 가혹한 생활난을 경험하면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희생을 내야만 했던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이변이며 무슨 재난이었던 말인가?”라고 밝히면서 “자주냐 예속이냐, 부흥이냐 망국이냐의 첨예한 결사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책동과 경제적 봉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일찍이 없었던 경제적 난관에 의해 우리 인민이 겪고 있는 시련은 측량할 길이 없다. 난관 앞에 굴복하고 일보 뒤로 물러서게 되면 10보, 100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며 망국노의 몸이 될 것이다”⁶³⁾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⁶⁴⁾, ‘강행군’ 등을 제창하면서 혁명의 수뇌부를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과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난관을 뚫고 나갈 것,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잃어버리지 말고 온갖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갖추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63) 「로동신문」, 1997. 7. 22.

64)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2월 초부터 1939년 3월까지 100일 동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온갖 고난을 이겨 내면서 만주의 남패자로부터 압록강 연안 국경지대로 진출했다는 행군에서 부쳐진 명칭이다.

다. 사회적 요인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주민들 사이에 체제 부정 의식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이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인구 유동성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의 외각 단체인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여성동맹 등 근로단체들의 조직생활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물질적 결핍과 생활고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 물질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 등을 중요시하는 자아중심의 개인 지향적 가치관과 실리주의적·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부분적이거나 체제 개방으로 인한 외부 사조 및 물물교환 접촉으로 인해 확산되었다.

사회체제의 이완은 결국 관료기구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부처 간 횡적인 조정에 혼선이 빚어졌다. 김정일 체제는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마저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급격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⁶⁵⁾ 북한의 지배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신뢰도는 점점 약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사회의 체제이완과 사회 이탈,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표면화되면서 북한은 심각한 사회위기에 봉착하였다.

김정일은 1996년 12월 7일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식에서 “어디에서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차 넘치고 있으며, 역전과 열차 칸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앞으로 해방 직후에 일어났던 신의주 학생 사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없다”고 식량 문제의 심화로 사회 질서가 극도의 혼란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인정한 바 있다.

65) 이종석·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 통일연수원, 1996), 42~43면.

식량난 이후 배급의 중단은 국가의 권위를 냉소하고 조소하는 사회심리를 더욱 조장하게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감시가 없는 곳에서는 회의하고 반발하는 행위양식을 조장하였다. 억압적 체제에서 발달하는 사회적 성격의 하나는 실제 감정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허위감정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⁶⁶⁾

더구나 중국 접경지역의 일반주민들이 탈북과 식량구입이 줄을 이었다는 것은 북한의 민심 이반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김정일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의 군당 책임비서, 안전부장(현 보안서장), 보위부장을 연대처벌 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⁶⁷⁾

최근에는 중국 내 은신 중인 탈북자들에 대대 검거 조를 운영하고, 검거한 탈북자들을 북한 내에서 공개처형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일부는 2007년 1월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더구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집트 대사 장승길 부부, 외교관 김동수 부부를 비롯하여 북한 고위층의 망명 및 한국으로의 입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 사회의 위기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뇌물이면 못할게 없다’는 식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정부패가 국가기강을 흔들 정도로 성행하면서 북한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⁶⁸⁾

66)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 : 통일부 신진학자 논문, 2002), 43면.

67) 김영수, “붉은기 사상의 실체”, 『새물결』 통권 192호(서울 : 자유평론사, 1997), 98~99면.

68) 조명철 외 24인, 『북한 50년』 (서울 : 연합통신, 1995), 202~207면.

더구나 범죄 및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난에 기인한 각종 범죄현상은 국가재산에 대한 절취와 절도, 강도, 사기, 밀거래 등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배급이 중단되고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방식이 암시장 기능에 의존함으로써 생필품에 접근하는 수단과 권력의 차이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확산과 심화된 불평등은 2002년 7.1경제조치를 통하여 엘리트층과 비엘리트층 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은 2005년 10월 1일부터 평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식량배급제를 다시 재개하였다.

2. 대외적 위기

김정일 체제의 대외적 위기 요인으로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변화와 북미, 북일 관계 악화, 한국의 경제성장과 북방정책이 크게 작용되었다.

가. 사회주의권의 변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변혁은 한국으로 하여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를 정상화 시키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 관계를 증진시킨 반면에,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와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립을 가중시켜 왔다.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혁⁶⁹⁾은 이들 국가들의 개혁 의지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이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에 실마리를 푸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1986년 2월 개최된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는 공산체제의

69) 서병철, 『공산권 붕괴와 독일의 통일』 (서울 : 계축문화사, 1991), 13~31면.

침체와 경제적 낙후를 인정하고 모든 공산권국가들이 공동 번영을 위해 개혁정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가속화 되었다.

① 1989년 8월 24일 폴란드 의회는 마조비에츠키를 총리(자유노조 기관지의 편집장)로 선출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였다.

폴란드는 현실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와 보수의회민주주의로 체제변화를 완성하였고 자유총선거를 통해 자유노조가 새로운 정치적 주역으로 등장했다.

② 1989년 10월 7일 헝가리 집권공산당인 사회주의노동당이 스스로 스탈린식 통치원칙을 포기하였다.

또한 1990년 3월 25일과 4월 8일에 실시한 자유총선거에서 좌파 정당들이 몰락하고 중도우파가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요셉 안탈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③ 체코슬로바키아는 1989년 11월 15일 5만 명의 군중이 참석한 대규모 시위를 통해 공산당 지도부를 굴복시키고, 스탈린적 전체주의 대신에 민주주의 체제를 창출하였다.

1989년 11월에는 평화혁명으로 공산통치를 종식시키고 1990년 6월 8~9일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하벨 대통령이 이끄는 “시민 포럼”이 압승을 거두었다.

④ 불가리아는 1990년 2차에 걸친 총선거(1990년 6월 10일과 17일)를 실시하여 100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던 기존 사회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16개 반체제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세력동맹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⑤ 루마니아는 1989년 12월 22일 “민족구국전선”에 의해 붕괴되었고 1990년 5월 20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구국전선이 승리하게 되었다.

⑥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990년 4월 12일 동독연립내각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추진원칙을 채택하고 1990년 10월 3일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⑦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는 1991년 8월 24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보수·강경파에 의한 쿠데타 실패 후 공산당을 해체함으로써 74년에 걸친 소련 공산당통치가 종식되었다.

이처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1989년은 공산주의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큰 시련과 변혁을 이룩한 시기였다.

그것은 1945년을 전후하여 소련의 영향권에서 정치·경제·사회를 일사분란하게 이끌어 왔던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기반이 「고르바초프독트린」과 함께 하루아침에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원인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공격과 도전”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동구사태의 원인을 사상의 빈곤 탓으로 돌렸다.⁷⁰⁾

그 후 김정일은 1992년 1월 3일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및 1993년 3월 1일 「근로자」에 발표한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담화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원인을 “사회주의사상의 신념화와 도덕화의 실패, 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른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약화,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포기하고 개인이기주의를 조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침체현상,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적 소유로 전환시킨 것”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생존전략으로 채택하여 왔다. 즉 내부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상호 호혜적 외교 관계를 이룰 수 없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위협성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 총포탄 정신으로 무장된 병영국가 체제에 입각한 군사력 카드를 이용하여 외교

70)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359면.

적 우위를 확보⁷¹⁾하려 하였던 것이다.

나.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

김정일 정권이 추구하여 온 핵개발과 실전배치라는 강성 생존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계기로 작용되어 오히려 대북한 봉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으로는 커다란 기근 사태를 가증시켜 왔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외교 및 경제적 봉쇄 정책과 군사적 위협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작전계획 5027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한·미 연합훈련은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으로 대표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1994년부터 실시해 온 연합전시증원훈련(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최초 도착 시부터 전방으로 이동, 전장에서 통합하는 일련의 절차와 경계 등을 포함하여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원 및 한국군의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한 미 증원전력의 절차연습이다.

독수리훈련(FE : Foal Eagle)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 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통합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연합 야외기동훈련이다.

2002년부터는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해 오던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하여 'RSOI/FE' 합동훈련으로 1~2주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은 한·미 연합사의 기본적인 전쟁계획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과 미국의 증원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2년마다 개정해 왔다.

71) 박현욱, “남북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대화 전술”, 『월간 북한』 200년 4월호(서울 : 북한연구소, 2000), 60~64면.

1990년대 초에 들어서 작전계획을 ‘북한 점령 작전’까지 포함하였고, 5027-92에는 한미 해병대가 원산상륙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한편 작전계획 5027-94에는 총5단계로 되어 있는 작전계획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5027-98에는 예방전쟁의 개념을 도입한 ‘선제공격’을 명시하고 “북한의 기습과 화생전”에 대비하여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마비는 곧 국가기능의 마비임을 감안하여 수도 서울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작전개념을 발전시켰다”⁷²⁾고 설명하고 있다.

2000년에 개정된 작전계획에는 중원군을 1990년대 중반 63만 명에서 69만 명까지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군사력 재배치 정책과 군사 변환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육군을 미2사단의 2개 여단 가운데 1개 여단만을 잔존시키는 방안으로 이미 결정하였고, 공군도 오산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제5공군을 지속적으로 전진배치 하였으며, 해군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기지를 확보하는 방안 또한 기항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늘 미제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전쟁도발책동은 더욱 악랄화, 횡포무도화 되고 있다. 집권 후 우리에게 대한 강경정책을 떠들며 우리공화국을 공공연히 악의 축으로,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현 부쉬행정부는 최근에 와서 대조선 고립압살과 핵전쟁도발책동을 미친 듯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이른 바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압박과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제는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민족을 반미대결전으로 부르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72)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서울 : 국방부, 1999), 67면.

반미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⁷³⁾고 촉구하여 왔다.

또한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기 위해 최첨단 군사장비들인 스텔스 전투폭격기를 비롯하여 각종 최신예전투기, 함선, 미사일 및 특수전무력을 포함한 첨단장비들을 한국 및 그 주변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과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사상결단 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북미의 직접적인 협상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그 목적에 따라 외교활동 제한조치, 경제관계 단절조치, 무역관련 조치, 국제적 테러행위지원 관련 조치, 대 공산권 제재 조치, 인권관련 제한 조치로 구분된다.⁷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3-3〉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현황

구분	분야	내용	관련근거	비고
1950. 6.28	수출	대북한 수출금지	수출관리법	상무부 정책사항
1950. 12.27	투자·금융	미국 내 북자산 동결, 북한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 사실상 전면금지	적성국 교역법	북한을 위험국가로 지정
1951. 9.1	무역	대북한 최혜국대우(MFN) 부여금지	무역협정 연장법	특혜관세 공여금지
1955. 8.26	무기거래	북한과의 방위산업물자 및 용역의 수출입 금지	국제무기거래규정	재무부 정책사항
1962. 8.1	원조	대북한 원조금지	대의원조법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대외원조금지

73) 「로동신문」, 2003. 6. 25.

74) 김연철 외, 『남북경협 가이드라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1), 143~145면.

1975. 1.3	무역	대북한 일반특혜관세 공여금지	통상법	
1975. 5.16		북한을 제재대상국가 Z그룹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금수조치	수출 관리법	
1986. 10.5	금융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 제공금지	수출입 은행령	공산주의 국가 일괄적용
1988. 1.20	테러	북한에 대한 무역, 대외원조, 수출입은행의 여신 제공금지	수출 관리법	KAL기 폭파사건 후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
1988. 4.4	무기 거래	국제테러 지원 국가와의 방산물자 및 관련 용역판매 및 수출입 금지	국제무기 거래규정	1955. 8. 26의 거래규정을 개정
1992. 3.6/6. 23		군수통제품목에 있는 물품의 수출 및 2년간 미국정부와의 계약금지 미사일, 전자, 우주항공, 군용기생 산제조와 관련된 북한의 활동금지	무기수출 통제법	북한의 대이란, 시리아 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한 제재

※출처 : 조동호 · 김상기,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의 경제적 효과”, 『KDI정책 포럼』 제149호(1999), 5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강구하기도 하였다.

<표3-4>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현황

일시	법적 근거	완화조치
1988. 1.3	해외재산 통제규정 개정	• 체육, 학술, 문화 등 비상업용 분야에 대한 미 여행사의 여행알선 승인
1989. 2.2		• 출판물의 수출입과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 허용
1989.	수출관리	• 식량, 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의 수출 허가

4.24	법 개정	
1995. 1.20	행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북한간의 전화, 통신의 연결과 이와 관련된 거래 허용, 개인적인 여행과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사용 허용, 언론사의 지국개설 허가 • 북한이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결되지 않은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 사용허가, 북한정부의 자산이 아닌 동결자산의 해제 • 미국기업이 내연재로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조치들 : 북·미 연락사무소의 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거래허용,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거래의 허용
1997. 4.7	해외재산 통제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 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2000. 6.19	해외재산 통제규정 · 수출관리 법 개정 및 대북교통 제한규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민간용 상업통제품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대북한 수출 및 제3국을 경유 재수출 허용하나 대북한 테러지원관련 제재조치 및 핵·미사일 확산관련 금수조치와 무기수출통제령에 따른 수출허가 금지정책 유효 • 대북 항공 및 해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제재조치 철폐 : 미국의 항공사와 해운사가 북한과의 운송을 위한 취항가능 • 해외자산통제규정을 개정하여 미·북한간 금융, 무역, 투자교류를 위한 자산의 이동은 가능하나 북한자산의 동결에 대한 해제조치는 유효

※출처 :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19~20면.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자주적 인간의 삶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오늘의 결사전으로 대항해 나갈 것과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철석같은 신념” 등으로 표출되었다.

북한은 “부쉬행정부는 강경고압자세를 취하면서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상대도 해보기 전부터 우리에게 대해 불량배국가, 인권유린국가, 무법국가, 테러지원국 등 부당한 딱지들을 붙이고 중상비방하면서 새로운 핵위기를 산생시키고 조미관계를 파국상

태로 몰아갔다...부쉬행정부는 2001년 9.11사건을 계기로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미국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테러분자로의 온상을 없애버리기 위한 세계적인 반테러전쟁을 선포하면서 테러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를 테러편으로 갈라놓았다....그동안 조미사이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리행하여온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부쉬행정부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로골화하고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화의 막 뒤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조성하고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데 대한 모든 합의들의 숭고한 리념을 유린하였다...부쉬는 우리의 정치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던 나머지 2002년 1월 30일 국회에서 한 년두교서 라는 데서는 우리를 악의 축 이라고까지 폭언하였다...부쉬 호전집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에서 기본은 반공화국 고립압살을 위한 제재와 봉쇄, 국제적 포위 전략이다...부쉬행정부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결여된 데로부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회담을 침체와 결렬에 몰아갔다.

첫째로 미국은 우리가 시종일관 제기 하고 있는 핵문제해결의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안이다...둘째로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선택포기를 국제무대에 깃발처럼 걸어 놓고 그것을 강요하였다..셋째로 미국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우라니움 농축문제에 대해서는 것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도 남조선의 핵관련 비밀실험사건에 대해서는 2중 기준을 적용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눈을 감아주고 있다...넷째로 미국은 대화상대방인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영상을 흐리게 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 중상 하는데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부쉬호전집단은 북침전쟁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방대한 자금을 들여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110억 US\$의 투자를 예견하는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후 미국은 감축과 재배치의 전력공백을 메운다는 구실 밑에 그것을 대폭 늘여 130억 US\$에 달하는 방대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있다...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가증되는 평화교란행위에 대처하여 우리가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자위적 수단을 부단히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 한 선택 이었는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힘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결에는 대결로, 선제타격에는 선제타격으로 대답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필승의 신념이다.

미국이 제도전복을 노리면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물리칠 수 있게 전쟁억제력을 질량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⁷⁵⁾을 촉구하여 왔다.

다. 한국의 북방정책

한국의 북방정책은 중국, 소련 그리고 동구제국과 기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과 외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산주의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관계의 추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국가와의 외교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이러한 정책실현을 위한 방법⁷⁶⁾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의 북방정책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73년 6월 23일에 발표한 평화통일에 관한 특별성명이 그 시발점으로 되었다.

북방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환

75) 「로동신문」, 2004. 10. 20.

76) 이상우, “한국의 북방정책”, 『통일』 1989년 5월호, 55~60면.

경을 조성하고 남북한 관계를 적대로부터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시키자는데 있다.

북방정책은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폴란드와는 1989년 11월 1일, 유고슬라비아와는 1989년 12월 27일, 체코와는 1990년 3월 22일, 불가리아와는 1990년 3월 23일, 루마니아와는 1990년 3월 30일에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1991년 8월 22일 알바니아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동구권 7개국과 국교수립을 매듭지었다.⁷⁷⁾

1990년 9월에는 한·소 수교, 1992년 8월 24일에는 한·중 수교에 합의하였다.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동서냉전의 해체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체질변화와 그에 따른 대외정책의 전환은 북한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형제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을 위기로 몰아갔다.

한·소, 한·중 수교에 대해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 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 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이 있다”⁷⁸⁾고 주장하면서 “오늘에 와서 소련이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맺기로 하였으니 이것을 배신이란 말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⁷⁹⁾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의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77) 외무부, 『외교백서 1990』(서울 : 외무부, 1990), 54~62면.

78) 「로동신문」, 1991. 1.1.

79) 「로동신문」, 1990. 10.5.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와 협력의 원칙하에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대결과 불신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북미·일 관계 정상화, 북한의 변화와 개방 촉진,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위한 군축 실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과제로 나서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핵문제를 해소하고 상호주의를 견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당사자 원칙과 주변 국가들과의 협조의 조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추진하면서, 전쟁방지와 항구적 평화 제도화,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기반 조성,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체제 추진원칙을 수립하였다.

또한 남북 당국 간 대화⁸⁰⁾의 정례화를 통해 상호 불신과 위협적인 요소들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 하에 남북한 상호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남북한 사회문화협력 사업은 1995년 이전 10년간에 비해 2005년에는 92건으로 5배나 증가하였으며, 2006년 남북 간 왕래인원은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남북한 간 교역도 2006년에는 북한 무역총액 40억 달러 중 중국의 17억 달러에 이어서 한국이 13.5억 달러로 북한의 제2의 교역 상대국이

80) 장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장성급 회담, 적십자 회담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경추위'를 중심으로 개성공단건설실무위원회,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입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와 농업협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176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였다.

되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7천 5백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남한 500여 명, 북한 7천여 명)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전초기지로 육성할 방침이지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시장통합, 화폐통합, 제도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여건 성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그동안 우호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대외협력관계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의 대북한 봉쇄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제2절 김정일 체제의 위기관리능력

북한은 심각한 체제위기⁸¹⁾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여 왔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생존전략은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 지향 정책’이다.

당면하게는 김정일 자신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경수로 건설, 경제회생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에 표면화되어 있는 강력한 군사적 담론과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서도 입증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표방하면서 한반도

81)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의 악화 김일성 사망과 경제난, 자연재해, 탈북자 증가, 사회기강 해이, 국제적 고립 등.

의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아울러 군사력 강화, 사회동원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왔다.

따라서 “정치사상적으로는 경제적 난관으로 동요된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현상유지적인 보수적 대응책이 주종을 이루었다. 사회통제와 체제 정통성 유지를 위한 선전사업의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경제난 악화가 초래한 정치사상에 대한 불신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현실수용적인 정책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경제난에 대한 대처방식은 부분적으로 기존의 경제논리를 넘어서는 대안들까지 확장되어 있다.”⁸²⁾

1. 정치사상적 측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기관리 방식은 군사국가의 제도화와 강성대국의 건설이다. 군사국가화란 군이 최고지도자의 명을 받들어 사회, 경제 전반에서 국가운명의 개척자로 나서는 양상을 말한다.”⁸³⁾

군사 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의 군사화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대중적 저항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봉쇄하려는데 있으며, ② 대외적으로는 군의 위력을 국제협상에 활용하려는데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북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안정의 위협에 대처하여 왔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4),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21)

82)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경남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83~84면.

83) 이종석, “북한위기의 구조와 전망”, 『통일경제』 1997년 1월호(서울 : 통일경제, 1997), 36면.

의 논문을 통해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이후 “붉은 기를 높이 들자”(1995.8.28),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혁명 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적 의리이다”(1995.12.25)의 논문과 1996년 신년공동사설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996. 5. 10 노동신문 사설 “야심가, 음모가들의 비열한 본색”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여 왔다.

1996년 2월 7일에는 “고난의 행군정신의 빛나는 계승에 우리 혁명의 혈통이 곳곳이 이어져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⁸⁴⁾고 주장하면서 고난의 행군정신⁸⁵⁾으로 체제 위기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과 아울러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북한이 처해있는 체제위기의 사상적 대응이라는 두 차원에서 김정일의 사상과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상과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토가 ‘강성대국건설론’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부각시키면서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⁸⁶⁾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유혹의 바람을 일군다 해도 자기의 혁명적 지조를 지키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해 혁명가의 존엄을 끝까지 빛

84) 「로동신문」, 1996. 2. 7.

85) 고난의 행군정신은 체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낙관주의 정신으로며 그 어떤 안락도 바람이 없이 간고 분투해 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말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국내외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정신을 내세워 빈곤과 궁핍을 노력경쟁운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고, 경제·사회부문에서는 경제과업 초과 달성을 군사부문에서는 총폭탄·자폭정신을 촉구했다.

86) 「로동신문」, 1999. 1. 16.

내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혁명적 양심이며, 오늘의 고난의 행군대오의 선두에서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하며 난관을 뚫고 걸린 문제를 푸는데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⁸⁷⁾고 강조하여 왔다.

더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곧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고 김정일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다”⁸⁸⁾라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유훈통치를 통해 김일성 사후 권력 승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밝혔다. 즉 선군정치는 북한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방식은 단순히 국방을 중시해야 한다는 대외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군대가 곧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⁸⁹⁾

북한은 “주체의 선군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군사를 기본으로 보고 선차적으로 내세우는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혁명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삼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갈 데 대한 사상이다. 선군사상은 총대철학과 선군혁명리론 그리고 선군정치방식을 기본구성내용으로 하고 있다...선군정치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투쟁방식,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차 넘치게 하였다...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련전련승하게 하였으며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생활

87) 「로동신문」, 1997. 4. 15.

88) 「로동신문」, 1994. 7. 23.

89) 위의 책, 226면.

의 모든 분야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안아왔다...선군정치는 자주외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지도적 원칙을 구현하여 우리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과정에 심화 발전되고 완성된 것이다...선군정치방식이 확립됨으로써 선군사상은 하나의 정연한 사상리론체계를 갖춘 혁명의 지도적 지침으로 심화 발전되고 완성되게 되었다...선군정치는 사상리론적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 사회주의 정치실천에서 노는 거대한 변혁적역할로 하여 인류정치사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선군시대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⁹⁰⁾고 강조하여 왔다.

북한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다박솔 초소를 찾은 것이 “이 땅위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역사의 날⁹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첫째, 대내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사회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체제 수호에 군사주의를 이용하려는데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 언급하면서 군대의 첫 번째 사명은 체제수호, 자주권 수호에 있으며, 군대가 약하면 국가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국가정권 자체가 위협에 빠지게 된다⁹²⁾고 밝혔다.

더구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난의 행군’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하면서 군의 정치·경제·사회적 선도역할을 반영하여 군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끌어 왔다.

둘째, 군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외적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군부가 대외적으로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그 누구도

90) 「로동신문」, 2004. 12. 22.

91) 「로동신문」, 2000. 11. 18.

92)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 군사선행,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평양 : 평양출판사, 2000), 52~53면.

북한을 알잡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대외협상에서 강한 군사력의 효용성에 대한 김정일의 믿음은 2000년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 시 그의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은 군력에서 나오고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경제회생에 있어서 군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³⁾ 북한은 “전당, 전사회적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이 벌어져, 사회전체에 군사적 기풍이 강조되었으며 건설도, 농사일도, 노래도 군대식으로 하자는 ‘인민군대 따라 배우기 운동’이 전 사회에 전개되었다.”⁹⁴⁾

현재 김정일이 제시한 선군정치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군이 차지했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수반하는 동시에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그로부터 파생한 주민들의 동요, 북한체제수호, 경제정상화, 정치사상적 모범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고”⁹⁵⁾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정치방식으로 자리매김 하였다.⁹⁶⁾

김정일의 군 중심의 통치행위는 1998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가시화되었다.

1998년 9월 5일 헌법을 개정한 김정일은 국가주석과 그 지휘 하에 있는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시켰다. 특히 헌법 제100조에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제102조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93)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10권 1호(2001), 279면.

94)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리상국가전략』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87면.

95) 고유한 ·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평양학회보 창간호』 (서울평양학회보, 2002), 194면.

96)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2~25면.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수반직과 국방위원장직이 사실상 권력 중추로 하는 이원적 통치구조의 제도화를 의미하고 있지만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며” 국가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⁹⁷⁾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에 이어 명실상부한 1인 독재 체제가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북한은 당면한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성대국’이라는 국가상을 제시하였고 “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규정했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에서는 “2000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난 위대한 전환의 해,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력사적인 해이다...20세기는 빛을 잃었던 우리 조선이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영웅조선, 천리마 조선으로 존엄 떨친 영광의 세기이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여 온 궁지 높은 세기이다.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여 우리의 신념,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세기의 마무리를 잘 한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이다. 쓰라린 곡절도 있었고 빛나는 위훈도 많았던 격동의 20세기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의 한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인민은 반드시 영광의 단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사회주의 락원”⁹⁸⁾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강성대국은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경

97) 「로동신문」, 1998. 9. 7.

98) 「로동신문」, 2001. 1. 1.

제강국”을 뜻한다. 사회주의 사상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은 최고의 애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결사옹위하고 수령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와 내부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와 유일사상교양, 치열한 계급투쟁의 결집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1990년대 위기를 계급문제 해결보다 민족성을 부각시키면서 민족주의가 체제의 중요한 이념적 좌표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사상과 신앙의 차이, 자본가, 군 장성, 집권 상층여부와 관계없이 지난날 민족 앞에 지운 죄를 뉘우치고 통일의 대오에 나설 것⁹⁹⁾을 촉구하면서 체제 유지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로 상징되는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남한에서 반북대결 정책을 연북화해 정책으로 바꾸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여 왔다.

북한은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온갖 원수들의 방해책동 속에서 진행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다...계급교양은 군인들과 인민들을 계급의 견결한 투사, 선군혁명의 힘 있는 담당자로 준비시켜 나가는 매우 중대한 사상교양사업이다...착취와 압박은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이며 그것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계급투쟁은 누가 누구를 하는 생사결단의 판가리 대결이다. 계급적 원수들과의 대결에서는 굴복하면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원수들과 끝까지 싸워야 하며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보람찬 삶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오늘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각방으로 저해하는 한편 경제적 난관을 기화로 우리 내부를

99)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선집 1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50면.

와해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하고 있다. 현 시기 경제건설전선은 심각한 계급투쟁, 반미대결전의 첨예한 전선의 하나로 되고 있다”¹⁰⁰⁾고 촉구하면서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며 반통일적인 외세와의 공조, 친미공조 행위가 계속되어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친미공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고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분렬공조이다...미국이 반통일대결과 동족압살을 추구하며 핵소동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추종하는 것은 미국의 기도대로 북남 관계개선 흐름을 차단하고 통일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부정적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¹⁰¹⁾고 강조하는 한편 반외세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민족의 단결을 추구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을 마련하였고,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바로잡고 사상, 기술,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존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강성대국건설의 필수적 조건인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현대화와 사회의 군사화는 커다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형식적이거나 권력을 분산해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유일체제를 해체시키는 쪽으로 정치체제를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¹⁰²⁾ 김정일 정권이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속도는 그만큼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선군정치는 1990년대 미국과의 안보위기에서 군을 강화하고, 그 힘에 의거해서 정치를 수행한다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100) 「로동신문」, 2004. 9. 26.

101) 「로동신문」, 2004. 10. 31.

102) 이종석,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방식 : 대내적 측면”,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경남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109~110면.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담보”라고 주장하면서, 선군정치가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고, 군대의 돌격대 역할, 군의 모범성의 사회적 확산,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촉구하여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군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하면서 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 중심으로 위기를 관리해 나갔다. 군부의 위상은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급속도로 강화되었으며 권력서열 및 대외정책 수행에서도 군부의 위상이 크게 부상하였다.

또한 김정일 최고사령관 취임이후 군부대를 중점적으로 현지시찰하면서 군사능력을 과시하여 왔다. 2006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 102회 중 군부대 방문은 72회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장령 편제직위 약 1,300직위에 1,000여명¹⁰³⁾을 승진시켰고 병사의 계급구조도 확대하였다. 따라서 과거 병사를 전사, 상등병의 2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군의 사기 진작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여 왔다.

2. 경제적 측면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불안과 정치 불안정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점진적인 경제개혁·개방과 식량문제의 해결, 인력동원의 극대화로 모색되어 왔다.

103) 1992년 4월 23일 664명(대장 16명, 상장 28명, 중장 96명, 소장 523명), 1993년 7월 19일 99명(중장 14명, 소장 85명), 1995년 10월 8일 14명(원수 2명, 차수 3명, 대장 3명, 상장 5명 등), 1997년 4월 13일 123명(차수 4명, 대장 1명, 상장 8명, 중장 37명, 소장 71명), 1998년 4월 15일 32명(상장 1명, 중장 11명, 소장 20명), 9월에는 차수 2명, 1999년에는 79명(상장 1명, 중장 2명, 소장 76명)을 장령으로 승진했다.

더구나 속도전식 경제방식이 한계에 이르면서 이 방식에 실용주의적 측면들을 보완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속도 중심의 사고에서 균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외국인 투자유치법안을 제정하는 등 외국기업과 자본 도입에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1993년 10월 ‘합작법’을 제정하였고, 1994년 1월에는 1984년 9월 제정한 “합영법”을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인민무력부 직속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행정기구인 44부를 신설하고, 해·공군사령부와 군단급 부대에 34부를 신설하여 외화벌이를 통제하여 왔다. 현재 북한군은 매봉무역총회사, 용성무역회사, 단풍무역회사, 홍성무역회사 등 40여 개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997년 4월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라는 명령을 하달되었으며, 농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군이 개입되어 있다.”¹⁰⁴⁾

북한의 합영·합자기업 총수는 1996년 5월까지 합영 70개, 합자 60개 등 모두 130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총련과 합작이 70개, 중국측과 합작이 40개이고 나머지는 남쪽 기업을 포함한 기타 국가와의 합작기업으로 밝혀졌다.¹⁰⁵⁾

또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공사(평양 만경대-남포, 46.3Km의 왕복 12차선)를 1998년 11월 착용하여 2000년 10월 10일 완공하였고, 1993년~1998년에는 총연장 2,000Km의 광케이블 공사(평양-함흥, 평성-사리원-개성, 평양-신의주 등 주요 도시와 군을 연결)를 진행하였다.

1998년 3월 개정된 무역법을 통해 대외무역을 일반 사회협동단체에도 허용하는 한편 2000년 2월 3일 남포시 항구동 100만평 부지에 평화자

104) 「연합뉴스」, 1999. 7. 29.

105)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5), 270면.

동차종합공장을 착공해 현재는 이탈리아 피아트 모델을 조립생산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리사회주의¹⁰⁶⁾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7.1조치 이후 국제 분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 왔다.

2002년 9월 12일 신의주행정특구¹⁰⁷⁾,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 11월에는 금강산관광특구로 대외개방지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처럼 전체사회의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지역이나 분야를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개방이 가져올 체제내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북한지도부는 개방의 필요성과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양립 불가능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나진·선봉 특수경제지대와 금강산관광구역,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서해공단 등과 같이 수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상호고립적인 지역들을 내부와 차단시켜 개방하는 “점분산형”개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⁸⁾

김정일은 “지난시기 경제관리 체계와 경제관리 방법이 그 대에는 옳고 좋은 것 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경제 관리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일군들은 변화 발전하는 요구에 맞게 경제 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식대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

106) 사회주의원칙 하에 경제활동의 최대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단위의 집단 이익을 우선하면서 개별 단위의 실리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10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고, 총면적은 132Km²이며, 기본법은 1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향후 50년간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권만을 보유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108) 함택영 외, 앞의 책, 99~100면.

하였다.

또한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에 따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감자농사 확대, 토지정리사업, 대형 수리사업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최첨단 기술로 장비된 닭공장들과 메기공장, 기초식품공장, 화장품공장 등 경공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각 및 경제 지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기구를 개편하여 당 중앙위 비서국 산하 22개 전문부서 중 경제정책검열부, 농업정책검열부 등을 폐지하여 당 조직과 인원을 축소시키는 한편 그동안 공식으로 두었던 당 비서에 박남기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이 새로 임명하는 한편 당내 경제부서의 내각 경제부서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내각 책임제의 실질적 시행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¹⁰⁹⁾, 1997년에는 독립채산제¹¹⁰⁾, 1998년에는 헌법을 개정¹¹¹⁾하고 20여개의 경제

109) 북한은 1965년 11월 15일 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분조관리제를 공식 채택하고 1966년부터 북한 전역에 적용하여 시행하여왔다. 그러나 생산실적 과대평가와 비현실적인 생산목표 설정 등의 부작용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세분화 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조의 규모를 10~25명에서 7~8명으로 대폭 축소 세분화하고 기존 작업반 단위로 적용하여 왔던 ‘우대제’를 분조에 직접 적용하였다. 둘째, 생산계획을 하향조정하였다.

생산목표는 최근 3년간 평균 수확고와 그 이전 10여 년간 평균 수확고를 합하여 다시 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분조원들이 직접 나누거나 자유처분권을 부여하였다.

110)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의 경영상 독자성을 가진 경제관리 원칙으로써 대상기관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2중 독립채산제로 구분되어 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치 않는 북한의 사회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1962년부터 완전독립채산제를 추진하여 현재는 모든 단위 공장·기업소에서 적용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일부 하부 경제단위에 다소나마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주요원칙으로는 ① 당 정책과 국가계획을 무조건 실행하고 기업운영에서 생산대중의 참여와 정치 사업을 선행할 것, ②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기업소의 운영상 융통성, 상품과 화폐간의 적절한 배합 등을 이룰 것, ③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이 옹계 결합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11)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은 총7장(서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 경제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개정헌법은 서문을 신설하고 권력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¹¹²⁾하는 한편 경제 분야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특징을 보였다.

1999년부터 2000년 1월까지 연합기업소·종합기업소 등 종합생산조직을 폐지하는 등 기업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중기계 연합기업소→대안중기계공장,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천리마제강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해제철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김책제철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흥남비료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남흥청년화학공장, 김중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승리자동차공장, 평양종합방직공장→평양방직공장, 나남탄광기계종합기업소→나남탄광기계공장,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태천수력발전소, 용성기계연합총국→용성기계공업관리국, 무산광산연합기업소→무산광산, 검덕광산연합기업소→검덕광산 등 44개 개별단위의 공장·기업소·관리국 체제로 축소 조정되었다.

기업소 조직개편은 정부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위한 중앙통제력을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경제회생을 목표로 한 경제적 실용주의 측면¹¹³⁾이 두드러졌다.

기구,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66개 조문 김정일을 위한 김일성 헌법으로 명문화 함.

112) 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권을 행사, 제111조)로 개편하여 종전의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였다. ②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에게 적절하게 이양하였다. ③ 정부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였다. 정부원을 '전반적 국가 관리기관'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내각총리에게 정부대표권을 부여하였다. ④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국방위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으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102조)고 규정하였다. ⑤ 지방행정체제를 일원화하였다. 그동안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위원회 또는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방행정체제를 지방인민위원회로 일원화 하였다.

113) 함택영 외, 앞의 책, 102~103면.

그것은 첫째, 시장 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수용은 개인소유 영역의 확장과 처분권의 확대에 나타났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틀 내에서도 주장이 가능한 경제운용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독립채산제, 원가·가격·수입성 같은 경제적 개념의 올바른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제회생에 목적을 둔 구조개편이다. 헌법에 행정경제영역에 상대적 책임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기업소의 구조개편은 행정, 경제 분야의 독자성 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지도부가 경제적 실용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북한 경제는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멈추고 1999년 이후부터는 플러스 경제성장의 회복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력, 석탄, 농업,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을 5대 선행부문으로 설정하고 선행부문의 산업정상화¹¹⁴⁾에 집중하는 한편 선행부문의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와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대외 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해외자본 활용을 경제회복전략¹¹⁵⁾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정하고 2001년부터는 전산업에 걸쳐 IT기술을 응용한 기술개건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도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해 15.7%, 2004년에는 6%, 2005년에는 14.7%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다.

더구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대외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

114) 농업부문에서는 식량문제 해결, 전력·선탄부문에서는 에너지문제 해결, 금속기계 및 철도·운송부문에서는 산업의 근간인 중화학공업의 정상화를 통해 전반적인 북한의 산업부문들의 정상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11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160~165면.

김정일은 1999년 1월 9일 “전력생산 증가야 말로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오늘 경제강국 건설의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돌파구는 전기·식량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이 강구한 조치들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기존 발전소들의 보수·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둘째는 안변청년발전소(81만 킬로와트), 태천수력발전소(75만 킬로와트), 남강수력발전소 등 10여개의 건설 중인 발전소의 조업을 단축시켰다. 셋째는 부족한 전력난을 각 지방, 공장·기업소별 자체로 전력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강하천·계곡물·조수·풍력 등을 이용하여 북한 전역에 5천여개소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의 편입을 적극 모색하면서 2000년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제도연구원’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를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남한 및 해외기업들과의 위탁가공을 겨냥한 가공무역법(2001년),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의도하는 남북경제협력법(2005년)을 제정하여 신의주, 개성, 금강산지역을 경제특구로 설정 개발하여 왔다.

200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장·기업소를 통폐합하고 2002년 2월에는 기업소간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점진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 7월 1일에는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새로 단행된 경제개혁은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시키고 배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 가격과 임금, 환율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과거 당 비서 중심의 기업경영을 지배인 중심제로 환원시켰으며 개인경작 확대, 금요노동제 폐지, 신의주 특구개발, 개성공단

건설 등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자본유치를 피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한편으로는 기술혁명소조 돌격대를 운영하고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및 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배인 기사장을 60대에서 40~50대의 전문기술진영으로 교체하고 기업경영의 효율화,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¹¹⁶⁾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강성대국론에 입각한 동원경제체제를 강화시켜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의 특징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자력갱생과 노력동원에서 찾는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제한적 경제 개방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경제난을 타개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을 강화하면서 자율 확대와 실리중심으로 경제운영방식을 전환시키고 대외개방 확대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①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을 강화하였다. 생산물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켜 쌀·옥수수·생필품·공산품의 가격은 평균 25배, 임금은 평균 18배, 공공요금은 20배, 환율은 150배 인상되었다.

2003년 3월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시장을 공식화하고 각 시·군 행정단위별로 상설 종합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시장을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종합시장은 평양시 40개를 비롯하여 북한 전역에 300여개의 종합시장을 추시범적으로 진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 6월부터는 그동안 기피해 왔던 개혁이란 용어를 공식사용하고

116) 송경호, “북한사회의 안정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안논총』 제16집 제1호(경기 : 공안문제연구소, 2004), 92~93면.

매대·점포 증가,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상업유통부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식량판매소 및 도매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상품마케팅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② 경제단위의 분권화·자율성을 확대시키면서 실리중심으로 경제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당 비서 중심의 기업경영을 지배인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생산단위의 분권화와 물자교류시장을 도입하여 자율적으로 30% 범위 안에서 지배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토지 및 농자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의 자율처분권을 20~40%로 확대시키는 한편 생산 분배 단위를 작업반에서 분조로 전환시켰다.

또한 현금에 의한 실적 분배를 확산시키고 개인 경작지를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였으며, 가족 영농제·포전 담당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토지 임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211고지”¹¹⁷⁾, “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¹¹⁸⁾이라고 선전하면서 식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김정일 제시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감자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이모작의 대대적 확대, 종자혁명, 토지정리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사육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 과거 김일성의 주체농법에 비해 김정일의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위기극복방식의 일환으로 김일성주의보다는 김정일의 사상이나 정책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령성 계획지표를 축소하고 하부단위의 자율성 강화, 공장 기업소에 금액상 목표만 제시,

117) 「로동신문」, 1998. 1. 1.

118) 「로동신문」, 1999. 1. 1.

계획초과생산물 처분 허용, 자체구조 조정권을 부여¹¹⁹⁾시키고, 기업의 경영방식과 분배방식을 수익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한편 재투자, 근로자 복지, 성과급 확대, 산업현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인정, 전면적인 기업재무조사, 2003년 5~11월에는 공채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경제관리 방식에 맞게 노무관리방식도 변화를 보이면서 노동자간 개별 경쟁에 따라 기본임금과 실적임금의 격차를 확대하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③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IT·이동통신사업 육성·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7.1경제조치 이후 신의주특구(2004년 8월 개발 중국의 반대 등으로 중단 됨), 2002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 등을 특구로 지정하였고 이를 남포 등 연안도시로 확대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한 경제특구와 관련된 하위규정 제정·발표, 기 지정된 나진·선봉특구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합의서 체결(2004. 1), 나진·선봉지역에 관세면제지역제공협약(2004. 10) 등 적극적인 개발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교환소를 설치하고 무역확대에도모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과개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대외경제관계 및 비공식적 경제부문의 확장에 비해 여전히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고수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주의와 실용주의 지향의 이중적 생존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생존

119) 「조선신보」, 2004. 12. 11.

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 분야에서의 제한적 개방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경직성과 경제부문에 있어서 민주개념·시장수급개념·다원주의 개념 등이 결여되어 있고, 폐쇄적인 북한의 법과 제도, 경직된 의식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회생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대폭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시장이 유입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 개방을 뛰어넘어 체제내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에서 탈피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나가는 개혁·개방의 혁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일체제하의 경제방식은 사상동원과 동원화된 사회체제에 기초한 속도전식 방식이므로 생산력 발전의 질적 상승 도모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 한 과제인 식량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라도 정상적인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새로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위기관리방식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처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본질적 위기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개방에 관해서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도적인 정비와 아울러 물리적인 인프라시설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서방 선진국가들의

대대적인 자본과 기술 유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적 측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점진적인 개방정책, 외부사조의 유입 등으로 사회질서와 국민들의 정신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민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사상 교양과 계급교양, 주민통제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식량난이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크게 작용하면서부터는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와 주민들의 동요를 증대시켰다. 더구나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의 급증과 이에 따른 주민상호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대북 식량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북한 방북이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시기 북한이 추진한 주민통제 방식¹²⁰⁾은 분배를 통한 통제와 이념적 정당화, 물리적 통제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① 분배를 통한 주민통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배급문제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부터는 분배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마저도 부정기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사실상 분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는 종합시장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종합시장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있다.

② 북한은 이념적 주입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동조를 이끌어 내면서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하여 주민의 복종을 강요시켜 왔다.

120) 차중환 외, 『북한의 현실과 변화 1』 (경기 : 나산출판사, 2005), 111~112면.

더구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등 김정일의 이상화와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고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계급교양을 한층 강화시켰다.

③ 분배를 통한 주민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물리적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주민통제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왔는데 인민무력부가 이에 가세한 것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기구로서, 정치사상범에 대한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공공질서의 유지·강화 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적발, 처벌 및 개개인의 신원조사와 사생활을 감시하여 왔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의 준법 분위기를 확립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당의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다.

1997년 5월부터 인민무력부가 주민통제에 가세하여 7월부터는 군 요원들이 단위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되었고 각 대학에 상주하면서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 처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민반 및 분조 담당제를 통해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공질서 유지, 안전사고 방지, 위생관리사업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우리 인민들은 사상적 신념이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증오하고 있으며 그런 자들과 한치의 타협도 없이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¹²¹⁾고 강조하면서 체제내부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해 한편으로는 핵심 당원을 중심으로 한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김정일에 대한 극도의 충성심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들을

121) 「로동신문」, 1997. 3. 31.

색출하여 숙청시키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더구나 장마당과 시장 활성화, 자영업이 성행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신흥부유층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뇌물수수·절도사건, 부정부패·범죄와 같은 사회일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는 독소인 미신과 황금만능주의, 부르췌아생활양식을 유포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¹²²⁾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성·해주·원산·신의주·청진·강계 등 주요 접경도시에 계급교양관을 설치운영 하는 한편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해 검거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 국경지대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경비초소를 증가시켜 나가는 한편 검거된 탈북자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체제에서 군이 가장 조직화된 집단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군으로 하여금 주민통제 역할까지 부여한 것이다.

더구나 군사적 위기상황을 극대화시켜 내부적인 단합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상통제를 강화시키면서 군민일치운동으로 주민들의 체제이탈을 방지하고 군이 주민들의 체제이탈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여 왔다.¹²³⁾

122) 「평양방송」, 2004. 8. 5.

123) 1996년 4월 군 입대 탄원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으며, 6월 5일 '조선소년단' 창립절을 기념하여 소년단원들로 하여금 3백만의 총 폭탄, 6백만 개의 수류탄이 되어 김정일과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정일 생일, 군 창건 기념일 등을 계기로 군민일치, 인민군 지원운동을 정식화 하는 한편 1993년에는 사회안전기관에 위임하였던 군인범죄수사권을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로 환수하였고 민간이 범죄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4. 대외적 측면

북한은 헌법 제17조에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¹²⁴⁾고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중, 북러 관계를 복원하였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념중심의 외교에서 실리중심의 외교로 전환하는 등 국제사회의 다원화에 부응한 민간외교에 주력하여 왔다.

첫째,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우방국가와의 친선 우호관계를 새롭게 복원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 11월 ‘투자 장려 및 호상보호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과학기술협력의정서’, 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 2000년 2월 9일 ‘북·러 우호선린협조조약’ 체결,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 북·러 협력강화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조와 상호협력,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11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8. 4일 북·러 모스크바 선언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TKR(한반도 종단철도)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 미국에 대한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124)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서울 : 북한연구소, 1999), 1130~1131면.

또한 2002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북·러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2000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장쩌민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개혁·개방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및 북한에 대한 식량과 원유 등 무상지원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의 친선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특히 2001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장쩌민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중국 방문은 양국 간의 상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데 대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하이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돌아보면서 “천지개벽”,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등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2001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장쩌민 주석의 평양 방문은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로 발전되었다. 2004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권력서열 10위권에 드는 고위인사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중국측이 이례적으로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과 10월 28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고위층 상호방문 전통지속, 협력적 내용이 담긴 교류영역 확대, 경제무역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 4원칙을 천명했다.

2006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급속히 변모된 남북지

역의 발전상과 약동하는 중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천지개벽한 상하이시를 돌아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는 경제특구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며 극찬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차에 걸친 중국 방문과 2차에 걸친 러시아 방문, 장쩌민·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2001년 7월 장쩌민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을 통한 북·중·러 3국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친선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신북방삼각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둘째, 핵 및 탄도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1991년), 남북합의서 채택(1992년), 신무역체제(1992년) 및 무역제일주의를 채택(1993년) 채택하는 한편 외국인의 투자·협작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1992~1994년)하고 핵무기 개발, 핵카드 사용 및 ‘제네바 북·미합의서’로 상징되는 적극적인 대외정책(1993~1995년)을 강구하면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타협(1999년) 등 정책변화와 사고의 대전환을 통한 당면 위기의 해결에 총력을 강구하였다.¹²⁵⁾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초부터는 북한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완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1998년 금창리 핵사태가 마무리되면서 9월 17일 제2단계 제재완화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억지력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입장으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왔다.

2000년 10월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

125)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 집문당, 1999), 250면.

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고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의 방북을 초대하는 등 북·미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대북강경정책 구사, 2002년 11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였던 중유 중단, 12월에는 북한 핵동결 해제, 2003년 1월 10일 NPT를 탈퇴 등으로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4년 1월 10일에는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끝수록 조선은 핵 역지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다 강화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으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고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핵 역지력으로 남아있을 것¹²⁶⁾이라고 공식적인 핵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9일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핵폭발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 개시되어 제4차 6자회담(2005. 7. 26~8.7 제1단계회의와 2005. 9. 13~16 제2단계회담)에서 9.19공동성명 발표에 성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제5차 6자회담(2007. 2. 8~13 제3단계회의)에서 9. 19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북·일 관계 개선은 1991년 11월 평양에서 북·일 수교교섭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1992년 6월 일본이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수교 교섭의 진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북한은 1993년 11월 공식적으로 수교 교섭을 중단시켰다.¹²⁷⁾

1997년 8월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로 북·일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으며, 2002년 8월 북·일 국장급회담에서 정상회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2년 4월에는 북·일 적십자회담,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

126) 「동아일보」, 2005. 2. 11.

127) 전정환, “북한 외교의 변화양상” 『계간외교』(제54호), 2000. 7, 15~16면.

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양선언’¹²⁸⁾을 채택했다.

또한 2004년 5월 22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일 수교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북한의 핵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은 정체되었다.

2005년 11월 이후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인 납치문제와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적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이념중심의 외교에서 실리중심의 외교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하는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북한은 EU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견제시키고, 경제적으로는 자본과 기술,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2000년 12월 12일 영국, 2001년 3월 1일 독일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2005년 말까지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EU국가(25개 회원국 중 23개국과 수교)와 수교하였다. 이밖에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과도 국교를 정상화하고 2002년 12월 대외 결제수단으로 미국 달러 대신 EU의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2006년 11월 17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되어 왔으나, 2.13 핵문제 합의로 북한과 EU의 경제교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128) 4개항으로 된 평양 선언은 첫째, 2002년 10월 중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둘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은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수교 과정에서 경협문제 합의, 셋째,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넷째, 핵 및 미사일 문제 등 안보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협력의사를 표명하였다.

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여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2003년 2월 김영남의 제13차 비동맹회의 참석, 2004년 2월 양형섭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4개국 순방, 2004년 7월 김영일의 몽골 등 아시아 5개국 순방, 2004년 11월 김영춘 쿠바 방문 등 1980년대 이후 둔화된 비동맹 국가들과의 우호증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 아·태위를 중심으로 한 민간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제4장 김정일 체제의 변화전망과 대응책

제1절 김정일 체제의 변화전망

북한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과 핵개발 및 인권문제 등으로 야기된 국제적 고립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제시하고 김정일 체제의 보존과 경제회복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체제의 변화에 있어서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이 상존해 있다.

김정일 체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① 어려운 경제난과 비효율적인 경제 및 사회체제로서는 국제적으로 단일화 되어가는 시장경제체제와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정치·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인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에 김정일 체제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① 북한의 핵 및 인권문제가 대외개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②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의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③ 개혁·개방에 따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등 외래문화의 침투로 인한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적 사상 이완현상이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²⁹⁾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와 문화,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군축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군

12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20면.

사 위협 감소와 같은 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의 변화는 정책의 변경, 엘리트의 교체, 정권의 교체, 체제전환, 체제와 국가의 붕괴 등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붕괴론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붕괴(collapse)를 정권붕괴, 체제붕괴, 국가 붕괴로 나누고 있으며, 이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붕괴로 분류할 수 있다.¹³⁰⁾

정권붕괴란 인민봉기나 쿠데타 등에 의한 최고지도자의 급작스런 교체를 의미하며, 체제붕괴는 기존사회주의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의미한다.

국가붕괴란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처럼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의 국가로 분할되거나 동독처럼 서독이라는 다른 국가에 편입되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체제의 위기에 관해서 혹자는 북한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혹자는 북한이 붕괴직전에 처해 있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붕괴를 ‘완전붕괴’와 ‘불완전붕괴’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¹³¹⁾

김정일 체제를 정치사상, 경제, 대남,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변화를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상적으로는 선군정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130) 김영춘,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2면 : 이재봉, “북한의 붕괴론과 전쟁 도발설에 대하여”, 『한반도 급변사태시 과제와 대책』 1997년 11월(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7), 1면.

131) 김명기,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의 개입에 따른 법적 문제”,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35~36면.

확립하고 체제 수호를 위한 전국민의 정치사상적 결집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김정일 체제의 붕괴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여 왔지만 실제로는 우려한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를 마무리하였고, 체제수호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변화는 김일성주석의 어록과 유훈통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기관리방식으로서의 선군정치로 대변되어 왔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약 3년간이나 당 총비서와 국가 주석직을 공석으로 두었던 이유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취약했기 보다는 공식적인 법적 지위보다 절대적으로 신격화된 수령의 초법적인 지위를 계승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¹³²⁾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 11. 1),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 6. 2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 10. 5)의 김정일 논문과 1996년 2월 7일 「로동신문」 사설 ‘고난의 행군정신의 빛나는 계승에 우리 혁명의 혈통이 곳곳이 이려져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김정일은 1997년 당 총비서와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1998년 9월 5일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49년간 지속되어 온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권력세습을 완성하였다.

또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표방하면서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왔다.

북한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 기술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의 능력에

132) 「한겨레신문」, 1997. 10. 21.

따라 일하고 수용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요새도 점령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물질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¹³³⁾고 밝히고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적 자극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¹³⁴⁾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성대국의 3대기둥으로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내세웠다.

더구나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한 나름대로 역사와 경험에서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여 수령의 절대화·신격화가 정착되어 있고, 사상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온 사회에 의식화·조직화가 진행됨으로써 마침내 수령제 사회주의의 내용적 제도화가 완결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군, 전인민적인 동원체제와 전지역 방어체제, 산업의 전시전환·생산체제, 민간 군수지원 체제, 민방위 동원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민방위, 반항공·소방·화생방·대피훈련 등 비상훈련을 일상생활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일사분란 한 신속성 있는 동원 체제를 갖추어 왔다.

특히 북한의 주민들은 2중 3중의 감시망 속에서 조직화된 생활을 하여야만 하고 평생 동안 조직에 몸담고 조직의 위임분공 수행과 사상 교양 및 훈련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13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60면.

134) 정창현, 앞의 책, 297~306면.

또한 “온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체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¹³⁵⁾으로 내세우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맡겨진 혁명과업 수행에 몸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전사¹³⁶⁾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하는 선군정치는 군대식 중앙집권적 집단주의 방식의 개발정책을 선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기관본위주의, 개별기관 차원의 실리주의를 모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기 보다는 김정일 체제의 정치행태로 고착되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탄력성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개혁조치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처럼 북한이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세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상 교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조성된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시간을 경과할수록 점차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호소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때문에 김정일 체제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제개혁·개방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경제개혁 및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정치이념의 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경제관리 및 운용논리에서 변화만을 도모해 왔다.

13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432면.

136)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525면.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조기 붕괴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곧 정치위기 및 정권붕괴, 체제붕괴, 국가붕괴로 연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김정일 체제의 권력기반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실현가능성을 엄격하게 분리시키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와 소말리아, 동구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식량난이 폭동을 유발하여 국가가 붕괴한 사례는 최소한 최근 역사에는 없었기 때문이다.¹³⁷⁾

더구나 남한이 경제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조기붕괴에로 유도할 수 없는 것은 ① 북한 붕괴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② 비록 남한이 북한보다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흡수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③ 북한의 군사력이 아직까지는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④ 북한은 오랫동안 대남 사업에 전념해 온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대북 전문 인력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북 정보수집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의 대북 협상능력이 북한의 대남 협상능력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¹³⁸⁾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방이 정권붕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개방과 북한의 물리적·사회적 통제력의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북한 엘리트와 인민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불만세력의 결집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조짐들이 미비하게 나

137) 시계무라 도시미즈,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지호 역(서울 : 지식공작소, 1997), 54면.

138) 임동원,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광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113면.

타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북한이 어려운 식량난으로 장래 정치위기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은 무자비한 물리적 탄압으로 정권붕괴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수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¹³⁹⁾

그것은 경제과탄과 사회적 통제의 이완에도 불구하고 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력한 통제 밑에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 수뇌부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정치·군사·보위계통 등 모든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인민무력부장이거나 총참모장이 어떠한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단 급 병력이 긴밀하게 움직임을 요하나 북한의 군부가 사단 급 병역을 이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사단 급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단장과 참모장, 정치위원, 보위부장이 1차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하고 산하 연대에는 연대장과 참모장, 연대정치위원, 보위부장을, 대대에는 대대장과 참모장, 정치지도원, 보위지도원을, 중대에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 등 많은 지휘관들과 참모부 구성원들을 설득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조직 원리상 지휘, 작전, 정치, 정치보위의 4계선이 각기 자기계통을 중요시 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의 쿠데타를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관리 체계와 경제관리 방법을 변화 발전하는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1990년대 들어서서는 실리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 1997년 독립채산제, 1998년에는 20여개

139) 정성장, “반체제적 북한청년들과의 대화”, 『한국정치연구』 제2집(서울 : 경희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243~244면.

의 경제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공장·기업소 통폐합, 2002년 2월 기업소간 물류교류시장 허용, 2002년 7월 1일에는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새로 단행된 경제개혁의 특징은 가격체계와 임금, 환율을 현실화시키고, 기업의 경영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배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을 강화시키는 한편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개편된 경제운영방식과 주요상품의 가격변화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4-1> 북한의 경제운영방식 개편 내용

구분	조치 전	조치 후	비고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가격 • 농민시장가격(수십 배~수백배 가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가격=농민시장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단일화 추구 • 시장가격 인정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월평균 임금 : 100~1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월평균 임금 : 2천원 내외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인상에 따른 생활비 보전
가격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사항 : 생산원가 • 설정기관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사항 : 생산원가, 국제시장 가격, 국내 수요 • 공급·설정기관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이외에 지방공장에 대해 가격 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실제가격과 판매가의 차이를 국가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계획수립
공장·기업소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채산제의 느슨한 운영 : 원자재 등을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 • 원가개념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채산제 강화 : 부족한 원부자재는 해당 공장·기업소가 자체 해결 • 원가개념 강화 : 자금, 물자, 노동력 투입 대비 실리를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무실한 독립채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 • 국가계획 달성보다 원가절감

	<p>원가개념보다 국가 계획 목표달성이 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전문화 부족 :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각 공장, 기업소가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 생산하는 경향 • 각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국가경제기관의 각종 통제(재정통제, 원에 의한 통제) 	<p>악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방법과 계산체계를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전문화 유도 : 연합기업소, 협동농장, 모든 공장, 기업소에 대해 생산전문화를 유도 •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의 기관, 기업소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정 개폐 	<p>을 통한 수익성 제고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전문화를 통한 기업의 자력갱생 원칙 강화
원부자재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자재 거래는 시장이 아닌 공장·기업소간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자재시장을 개설 • 일정 비율의 생산물을 자재용 시장에 납품 • 다만 교역물자의 종류와 범위는 국가가 규정하고 대금은 은행결제로 이루어지도록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범위의 확대 • 원부자재 배분의 효율성 제고
분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적 분배주의 팽배 •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유명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장·기업소의 실적평가는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실시 • 수익성이 좋은 공장·기업소들에 대해 더 많은 수익을 분배하여 노동자에게 추가노임(상여금)을 지급 • 유희노동력을 국토, 농촌건설 등에 동원하되 작업수행정도에 의거하여 반드시 보수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급 강화 • 국가의 무차별적 노동력 동원 관행 자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소비재,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급제도의 사

보장 체계	등에 대해 국정가격을 적용하여 거의 무상으로 공급	제값을 지불하도록 조치 • 다만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장(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제도) 등은 유지	실상 폐지 • 재정지출 규모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로의 전환 기반 조성
-------	-----------------------------	--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공보』, 2002-8-21호에서 재인용.

<표4-2> 주요 상품의 가격 변화와 인상률

구분	항목	단위	국정가격		
			이전 가격 (원)	개정된 가격 (원)	인상률 (배)
상품가격	쌀	수매가격	0.82	40	48.78
		판매가격	0.08	44	550.0
	옥수수	수매가격	0.49	20	40.82
		판매가격		24	
	콩	판매가격		40	
		수매가격			
	석탄	톤	34.00	1,500	44.0
	전력	천 KW	35.00	2,100	60.0
	휘발유/옥탄가 95	톤	922.86	64,600	70.0
	전차요금	1회	0.1	1	10.0
	지하철 요금	1구간	0.1	2	20.0
	침대차 요금	평성(평북)-남양(함남)	50	3,000	60.0
	유원지 입장료	송도해수욕장	3	50	17.0
	세수비누	개	3	20	6.67
	남자운동화	컬레	18.00	180	10.0
	냉면	옥류관	10	145	14.5
	집세	평양기준	수입의	1평방	-

			0.03%	미터당 월 2원	
	월간잡지	조선문학	1.20	35	29.17
	일일 탁아소 간식비	월액		300	
임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부	월	-	6,000	-
환율	대미환율	1달러당	2.12	153	72.0
관세	비누, 신발, 직물		20%	40%	2.0

※출처 : 전진상,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120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172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료 및 동력문제 해결과 발전소 기술 개선, 석탄생산 증대, 기계공업 설비 확충, 최첨단 기술도입, 공업 분야의 구조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2006년 2월 23일에는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1950년대 천리마운동을 통해 전쟁의 폐허로부터 재건의 틀을 마련한 것처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인 소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¹⁴⁰⁾을 통한 체제안정 및 내부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적내부 동원의 극대화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를 전면 개방하고¹⁴¹⁾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한

140)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1975년 11월 19일 당 중위 제5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대표적 노력경쟁운동으로 1975년 12월 1일 함남 단천군 검덕광산에서 시작되어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로 확산되었다.

141) 동승용, “경제개방정책”,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7), 332~333면.

편 금강산·백두산·평양 관광에 대해 우호적이고 신축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07년에는 농업 및 이동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작물배치 개선, 과학기술 보급체계 확립, 정보농업 실시로 800만 톤 알곡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완성, 지방도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중계기지 건설, 전화기의 디지털화, 휴대전화 기술 발전에 투자, 국제이동통신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향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기존의 경제정책을 견지하면서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서방선진국들과의 대대적인 투자유지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는 북·미 국교정상화 및 미국의 추가경제제재 완화조치, 미국의 투자유치 등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며, 아울러 북·일 관계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선차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구조적 모순과 소모적인 정쟁을 청산하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공존을 제도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개성-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부축과 원산-청진-나진·선봉의 동부축을 경제특구·개발거점으로 삼아 경제재건의 견인차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자본주의적인 정치방식과 경제관리 방법을 본 따거나 도입한다면 사회주의자체가 변질되거나 붕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의 기본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대남관계에서는 기존의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보이면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한층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과거와 같은 강경일변도의 대남전략이 서서히 완화되고 전술적 변화를 보이면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통한 체제유지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선언 이후 각종 남북대화 및 경협,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과잉된 긴장상태, 의사소통의 장애,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장애 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¹⁴²⁾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의 변화¹⁴³⁾는 ① 남북관계의 존재 양식을 대립과 갈등 중심으로부터 이해 및 협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② 당국간 관계의 제도화 및 쌍방간 협상양태의 변화가능성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제한적 조치들이 강구되어 왔다.

2000년 7월 이후 2006년 7월까지 남북장관급회담은 19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경제적 의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서해 상공을 통한 남북한 직항로 개설, 남북한 군 사이에 MDL 일대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남북군사실무회담 등 남북간의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까지

142) 박형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서울 : 통일연구원, 2000), 31~32면.

14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년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98~100면.

진행되지 않고 있다.

③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북한이 과거에는 남한을 배제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으나,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악화되었던 북·미 관계가 2007년 2.13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이라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체제 생존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대외원조를 도모하는 실리외교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조인하고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관련한 금창리 핵문제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결국 미국의 대북경제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양보를 이끌어내었다.

1998년 12월과 1999년 12월 유럽연합과 2차례에 걸친 회담, 2000년 일본과의 수교회담 재개, 2000년 이후 비동맹국가들과의 우호증진 등 전방위 외교를 전개한 결과 2006년 현재 155개국과 수교하였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NPT 공식 탈퇴를 선언하였고 2006년 10월 9일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탄산에서 소규모 핵실험에 성공했다.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2007. 2. 13)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하였다.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4-3> 9. 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내용

9.19 공동성명 요지	2.13 합의 내용
<p>제1조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2항) •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혹은 재래무기로 공격·침공 의사 불 보유 • 남한 내 핵무기 부재 확인 •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6항) <p>제2조 : 관계 정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은 상호 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조치 • 일·북 관계정상화 조치 <p>제3조 : 대북 국제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 증진 •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용의 표명 • 한국은 2백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7.12) <p>제4조 :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개최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p>제5조 : 이행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단계 이행계획 : 60일 이내 •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목록 논의 •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 북일 관계정상화 대화 개시 • 중유 5만 톤 상당 에너지 지원 ● 5개 실무그룹 구성 :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 다음 단계 이행 계획 :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 시설 불능화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인도적 지원 제공 ● 6자 장관급회담 개최 :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한반도 평화체제 : 직접 관련 당사국간별도 포럼에서 협상 ● 차기회담 개최 : 2007. 3. 19

현재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북한이 핵시설 폐쇄에 대한 상응조치로 100만 톤 이상의 중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의 규모와 비용분담, 시한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중에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러시아·중국·일본 등 1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외교를 확대하는 한편 EU 25개 회원국 23개국과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비동맹 국가들과의 우호증진에 주력하면서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왔다.

북한의 당면 위기와 대처방향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4〉 북한의 당면 위기와 대처방향

위기분야	위기의 연계 상승작용	위기 대처 방향
A. 경제위기의 봉착 B. 사회통제의 이완 C. 주체사상의 도전 D. 통치권위의 추락 E. 홍수홍년의 재해 F. 군부통제의 문제 G. 대외환경의 악화		가. 정경분리 정책 나. 폐쇄·파쇼통제 다. 우민화 사상교양 라. 군사형 동원체제 마. 대외협력·개방

※출처 :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 집문당, 1999), 238면.

1990년대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특징¹⁴⁴⁾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외자유치정책이다. 북한은 1992년에 나진·

144) 정진상,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153~156면.

선봉지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웠다.

1992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50여개 이상의 외자유치 관련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② 과거 사회주의권 시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시장 다변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대외무역정책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인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에 주력하면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가공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③ 대외경제관계에서 정치적 비중을 줄이면서 시장경제원리 및 효율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자본주의식 거래방법을 방영한 무역법을 제정한 것은 정책의 변화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무역형태를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다. 무역방식에 있어서 직접무역과 중개무역 외에도 가공무역의 확대를 통한 달러벌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⑤ 무역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무역에서 탈피하고자 1990년대 초반부터 기구개편을 통한 무역 분권화를 시도하여 왔다. 1998년 무역기구를 개편하여 무역성으로 개칭하는 한편 중복되는 업무를 가진 기구를 통폐합하고 무역성 산하 무역경제연구소를 조직하였다.

향후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체제강화를 위한 주민통제와 사상교양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김정일의 신사고에 입각한 실용주의 정책을 확대시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개혁과 대외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 통제 및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식 사회주

의에 입각한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 등 검증절차를 거쳐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대외환경의 기회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의 실익을 도모할 예상된다.

특히 기존 우방 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인 실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1980년대 이후 퇴조하기 시작한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와의 유대강화를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일 체제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많은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그렇지만 김정일 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예견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김정일의 퇴진을 촉진하거나 그를 대체할 세력이 부재하고 아직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주민들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다.¹⁴⁵⁾ 반면에 지도자 및 집단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김일성에 대한 지지도가 작게는 60~70%에서 많게는 90% 수준에 있는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40~50%정도만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⁶⁾

특히 집단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주의가 반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집단주의를 수용하고는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인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5)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189면.

146)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87~90면.

제2절 한국의 대응방안

지난 반세기에 걸친 남북 분단사를 돌이켜 볼 때 한반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위기에 대처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 북한의 전쟁도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일 체제의 붕괴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론적 시각은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체제불만세력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고립과 개혁·개방에 따른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멀지않은 앞날에 7천만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급변하는 북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는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붕괴론은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 사망 이후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인 여론과 추이와는 상반되게 식량지원이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한국이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준비가 사실상 미비한 상황에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의 발전과 번영에 필수조건이라는 현실¹⁴⁷⁾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우리는 과거 독일의 경우 동부독일이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없이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117만 명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군사력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¹⁴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일독일의 경험과 북한은 판이한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¹⁴⁹⁾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정부는 한반도의 우발적인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비폭력적인 체제변화를 유도하면서 통일을 달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북한의 붕괴로부터 과생되는 국내외적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① 김정일 체제의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사전 봉쇄하고 초기에 진압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북한 내부의 쿠데타 및 정변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 ‘불개입’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고, 사태의 파급을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매우 조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만의하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사태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여 과도한 반응으로 확전을 부추기거나, 혹은 적시 대응기회를 놓쳐 오관을 불러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¹⁵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사전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중국정부와의 전쟁억지를 위한 협조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② 탈북난민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한 탈북난민은 최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147) 서동만, 『북한의 개방과 통일 전망』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119~121면.

148)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경남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8~9면.

149)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97), pp. 487~494.

150) 허남성, 『북한체제 급속붕괴시 군사대응 방안』 (서울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8), 57면.

예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유입될 것이나,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량탈북문제는 북한의 복구정책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고, 한국의 사회혼란을 가증시키면서 자칫 주변강대국의 개입을 유발하여 한반도 문제가 국제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량탈북난민에 대비하여 전면억제¹⁵¹⁾, 전면허용¹⁵²⁾, 제한허용¹⁵³⁾ 등 세 가지 대응방침을 수립하여 탈북 난민의 허용 규모에 따라 초기에는 휴전선과 해안을 봉쇄하여 일정규모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점차 확대하여 난민촌을 형성하는 등 주변국가와의 공동보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정부가 비핵화를 준수하고 미군의 단계적 철수 보장,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반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대륙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③ 흡수통일에 대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주변 4강이 미묘한 관계를 보이면서 각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반도의 모든 사안을 주도적 입장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지역의 치안확보 및 군의 무장해제, 재배치, 경제재건 등의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에는 UN 주도하에 사태를 수습한다면 안정적 사회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응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최후수단으로 전쟁이라는 최악의 길을 선택할 가능

151) 유우익,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내정치적 대비”, 『정책포럼』 1997 통권 21호.

152) 허남성, 앞의 책, 66~68면.

153) 박광작,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난민대책”, 『정책포럼』 1997 통권 21호, 48~49면.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전쟁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 북한은 117만 명의 병력과 전후방이 따로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육군은 동부·중부·서부전선과 해주-남포, 평양 권지역의 5개 중심지역과 9개의 후방지역으로 병력을 분산배치 하였고, 평양-원산이남 지역에 지상군병력의 70%, 함정 60%, 전투기 40%를 전진배치 하였다. 또한 5, 7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 전쟁준비를 완료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여 왔다.

따라서 핵을 비롯한 탄도미사일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전면전 도발 책동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군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비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는 적극적인 방어계획을 수립하여 개전 초 한강 이북지역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미연합군의 우세한 화력으로 2주안에 종국적 승리를 이룩한다는 작전계획 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군을 최단시간 내에 격퇴함과 아울러 군과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남북한이 평화공존으로 통일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 당분간 김정일 정권은 대외관계 개선 및 경제 발전 노력 등을 강구하면서 체제 위기요인을 억제하고 현상 유지적인 차원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확보하여 비교적 쉬운 분야부터 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⁵⁴⁾

① 평화와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

154) 박재규, “남북대화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월간 북한』 2000년 4월호(서울 : 북한연구소, 2000), 52면.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완료하고 그 개통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의 성공적 출발은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적 상호 실질적 협력관계를 확대시키면서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분야의 식량, 비료, 농기구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확대를 선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광분야를 점진적으로 북한 전지역으로 확대시키면서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미귀한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적십자 및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민간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상황 방지를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대화를 진정한 평화 정착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북미 또는 남북한 관계를 필요에 따라 관민 분리, 남한 당국 배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한층 발전시키고 북한을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는 정책상의 지혜가 필요하다.

③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대미, 대일 수교가 우리의 전략적인 화해 협력 방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변 4강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미국은 군 전략 강화 및 병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12,500명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을 기동타격부대와 공군, 해군 지휘통제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북한을 군비증강으로 몰고 갈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급회담과 군장성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 및 긴장 해소, 신뢰회복과 군축 실현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하다.

북한은 1999년부터 경기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전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김정일 정권은 무엇보다 개혁·개방의지를 재천명하고 외국기업 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기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인프라 형성, 통관관세 간소화, 자국에 송금 및 입출금의 자율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돌발사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정치·경제·사회·외교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으며, 아직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국제정세의 커다란 변화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제난 및 사회운용 시스템의 비효율성,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대외적으로는 동·서 냉전의 종식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이들 국가들과 추진되어 왔던 경제교류협력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이 세계 초일류국가로 등장하면서 강력하게 추진된 대북봉쇄정책과 한국의 경제성장, 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북한을 외교와 안보, 경제적인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②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사망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동요, 김정일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위기와 김정일 체제의 리더쉽, 관료기구의 기능 약화, 경제난 및 체제이완, 사회이탈 및 부정부패, 각종 범죄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동요되면서 통치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구조적 모순과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경공업과 농업이 경시되면서 산업간 불균형, 기존 사회주의권과의 경제협력 단절, 자연재해, 자본과 기술의 한계, 노동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체제의 이완과 사회이탈이 가속화되어 관료기구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사회부정의식이 확대되었다.

둘째, 김정일 체제의 위기관리능력과 그 구현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기관리 방식은 군사국가의 제도화와 강성대국 건설이다.

따라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위기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정치사상·경제·사회·대외적 실천 활동을 도모하여 왔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체제안정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경제개선 조치, 대외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① 김일성 사망 이후 과도기적인 체제위기와 사회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에 걸친 유훈통치를 실시하고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하였다.

김정일은 유훈통치를 통해 김일성 사후 권력승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는 한편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명목상으로는 국가수반직과 국방위원장직이 사실상 권력 중추로 하는 이원적 통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자가 되었다.

②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과 아울러 김정일의 사상과 지도력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켰다.

먼저 선군정치를 제시하여 대내적으로는 경제난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체제 수호와 경제회생에서 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군의 위상을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체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

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전개하면서 체제 이완 및 어려운 경제난을 체제 결집과 단결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군을 강화하고 전당, 전사회적으로 군인기풍을 확립하여 건설도, 농사일도, 노래도 군대식으로 하자는 ‘인민군대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현재 북한의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군이 차지했던 지위와 역할을 수반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사상동요, 체제수호, 경제정상화, 정치사상적 모범의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정치방식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③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력 동원을 극대화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실리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북한은 2002년 7.1경제개선조치를 단행하고 국제 분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변화를 보이는 한편 신의주행정특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대외개방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1999년부터는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개인소유 영역 확장, 처분권 확대, 경제운용의 합리성 강조, 경제회생에 목적을 둔 구조개편 등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을 강화하면서 경제단위의 분권화·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실리중심으로 경제운영방식을 전환하고 대외개방을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특히 전력, 석탄, 농업,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을 5대 선행부문으로 설정하고 선행부문의 산업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토지정리사업,

대형수리사업, 경공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내각 및 경제기관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④ 경제적 어려움과 외부사조의 유입 등으로 사회질서 및 국민들의 정신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 계급교양을 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전개하면서 김정일 우상화와 유일적 지도체제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들의 결집을 이루어내고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한 주민 복종을 강요시켜 왔다.

특히 과거 주민통제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던 것을 인민무력부가 가세하고 ‘반사회주의적 요소’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체제내부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해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한편 집경지대에 계급교양관을 설치운영하면서 경각심을 한층 높여나가고 있다.

⑤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북중, 북러 관계를 복원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념중심의 외교에서 실리중심의 외교로 전환하고 국제사회의 다원화에 부흥한 민간외교에 주력하여 왔다.

더구나 북중, 북러, 중러 정상은 양국의 상호방문을 통해 친선우호관계를 복원하였고 신북방삼각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북미 고위급회담과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2.13합의를 도출하여 9.19성명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EU 25개 국가 중 23개 국가 국교를 정상화하여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견제시키면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이밖에도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비동맹국가들과의 우호증진 및 민간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셋째, 향후 북한은 김정일 체제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전국민적 정치사상적 결집과 핵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남북한 공존, 실리외교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전국민의 정치사상적 결집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의 틀 속에서 최소한의 개혁, 개방요소를 도입하고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서방선진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인도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생존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북미, 북일 적대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시키고 국교정상화를 통해 대외원조 및 실리외교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남북관계는 구조적 모순과 소모적 정쟁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 하에 남북한 공존을 제도화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넷째, 북한의 변화에 대처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① 김정일 체제의 붕괴에 대비하여 우발적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난민의 사전대책 수립, 흡수통일에 대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분제의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우발적인 전쟁재발을 방지하면서 비폭력적인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사전대응태세를 완비하여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외적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주변국가들과의 전

쟁억제를 위한 사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량탈북 문제가 한반도의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주변국의 개입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억제, 전면허용, 제한허용의 단계로 설정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주변국가들이 미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문제를 주도적 입장에서서 주변4강과 국제적 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북한지역에 치안문제 등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UN을 통한 사태수습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흡수통일에 대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북한이 최후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군은 아군의 피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북한군을 최단시간 내에 격퇴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국민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강구하였다.

③ 향후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현상 유지적인 차원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평화공존으로 통일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진정한 평화정착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미, 북일 수교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구하면서 남북대화의 정례화,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 상태를 해소시키면서 남북한의 신뢰회복과 군축실현을 위한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고유환, “김일성 사후 3년 북한 무엇을 남겼나”,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1997년 7월호.
- 고유환 ·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 평양학회. 서울평양학회보 창간호, 2002.
-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서울 : 국방부, 1999.
- _____, 위기관리실무지침. 서울 : 국방부, 1998.
-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 김명기,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의 개입에 따른 법적 문제”, 한반도 급변 사태와 국제법.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성훈 · 심의섭 편저, 사회주의와 북한의 농업. 서울 : 비봉출판사, 2002.
- 김연철 외, 남북경협 가이드라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1.
- 김영수, “붉은기 사상의 실체”, 새물결 통권 192호. 서울 : 자유평론사, 1997.
- 김영춘,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 민족 중심적 이해를 위하여. 서울 : 당대, 1996.

- 김학준, 김정일과 코카콜라. 서울 : 동아출판사, 1995.
- 남궁억, “북한의 쌀 지원요청 배경과 지원 방안”, 구조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동승용, “경제개방정책”, 김영수 외, 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7.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1999.
- 박광작,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난민대책”, 정책포럼 1997 통권 21호, 1997.
- 박재규, “남북대화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월간 북한 2000년 4월호. 서울 : 북한연구소, 2000.
- 박헌옥, “남북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대화 전술”, 월간 북한 2000년 4월호. 서울 : 북한연구소, 2000.
- 박형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 비상기획위원회,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비상기획위원회, 1996.
- 서동만, 북한의 개방과 통일 전망.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 서병철, 공산권 붕괴와 독일의 통일. 서울 : 계축문화사, 1991.
- 송경호, “북한사회의 안정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안논총 제16집 제1호. 경기 : 공안문제연구소, 2004.
- 시게무라 도시미즈,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지호 역. 서울 : 지식공작소, 1997.
- 외무부, 외교백서 1990. 서울 : 외무부, 1990.
- 유우익,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내정치적 대비”, 정책포럼 1997 통권 21호, 1997.

-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10권 1호, 2001.
-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 집문당, 1999.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 도서출판 황금알, 2004.
- 이상우, “한국의 북방정책”, 통일. 1989년 5월호.
- 이용필, 북한정치체계. 서울 : 교육과학사, 1985.
- 이용필 외 3인, 위기관리론. 서울 : 인간사랑, 1992.
- 이종석, “북한위기의 구조와 전망”, 통일경제 1997년 1월호. 서울 : 통일경제, 1997.
- _____,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 _____,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 · 체제 · 지도자.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 이종석 · 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 통일연수원, 1996.
- 이재봉, “북한의 붕괴론과 전쟁 도발설에 대하여”, 한반도 급변사태시 과제와 대책 1997년 11월.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7.
- 임동원,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광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 임창수, “김일성 사후 북한의 위기원인 · 관리 · 해소에 관한 분석”,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 : 통일부 신진학자 논문, 2002.
- 장달중 외, 김정일 체제의 북한. 서울 : 아연출판부, 2004.
- 전정환, “북한 외교의 변화양상”, 계간외교 제54호. 2000.

- 정성장, “반체제적 북한청년들과의 대화”, 한국정치연구 제2집. 서울 : 경희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 정진상,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5.
- 정희태, “북한의 대미위기관리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 조동호 · 김상기,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의 경제적 효과”, KDI정책 포럼 제149호, 1999.
- 조명철 외 24인, 북한 50년. 서울 : 연합통신, 1995.
-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서울 : 조선일보사, 1997.
- 차중환 외, 북한의 현실과 변화 1. 경기 : 나산출판사, 2005.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 최진욱, 김정일 정권과 한반도 장래.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년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_____, 2007년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하이와라 료(양창식 역),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 서울 : 도서출판 알파, 2005.
- 한국은행, 1999년 북한 GDP 추정 결과. 서울 : 한국은행, 2000.
- _____, 200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서울 : 한국은행, 2003.
-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경남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 한울, 1999.
- 허남성, 북한체제 급속붕괴시 군사대응 방안. 서울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

연구소, 1998.

2. 북한 문헌

김기호, “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을 거세하려는 현대수정주의론의 부당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리상국가전략.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91년 제5호.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선집 1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 군사선행,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_____, 김일성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김화 · 고봉, 21세기태양 김정일장군.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권오현, “생산수단에 의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 평양 : 평양출판사, 1993.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제1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원출판사, 1973.

3. 외국 문헌

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97).

Herd, Richard G. Crisis Resolution :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 Confrontations(Boulder : Westview Press, Inc., 1978).

Hermann, Charles F., Crises in Foreign Policy : A Simulation Analysis(Indianapolis : The Bobbs -Merrill Company, Inc., 1969).

Lebow, Richard Ned, Between Peace and War : The Nature of International Crisis(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McCormick, James M., "International Crises : A Note on Definition,"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 Vo1. XXXI, No. 3(1978).

Richardson, James L. Crisis Diplomac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Rusten, Lynn, and Paul C. Stern, Crisis Management in the Nuclear Age(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ic Press, 1987).

Winham, Gilbert R. New Issues in International Crisis Management.

Boulder : Westview Press, 1988.

Young, Oran R. The Intermediaries : Third Parties in Institutional Crisi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4. 기타 자료

동아일보, 2005. 2. 11.

로동신문, 1990. 1. 1, 10. 5.

_____, 1991. 1. 1, 6. 25.

_____, 1992. 2. 4.

_____, 1994. 7. 23, 11. 1.

_____, 1995. 6. 19.

_____, 1996. 2. 7.

_____, 1997. 3. 31, 7. 22.

_____, 1998. 9. 7.

_____, 1999. 2. 9.

_____, 2000. 11. 18.

_____, 2001. 1. 1.

_____, 2003. 6. 5, 8. 1, 9. 3.

_____, 2004. 9. 14, 12. 22.

연합뉴스, 1999. 7. 29.

조선신보. 2004. 12. 11.

평양방송, 2004. 8. 5.

한겨레신문. 1997. 10. 21.

책임연구보고서 2007-12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